

2013.2. 12. 8 ~ 12. 14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세미나

「지상의 평화」반포 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한국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2013년 12월 8일(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주최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후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총동문회

사회교리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2013.12.8~12.14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 행사

「지상의 평화」반포 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한국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 첫째날 (기념 미사와 세미나) | | |
|--|-----------------|---|
| ☑ 2013.12.8.(일) 오후2시~6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주제 : 한국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 | |
| 14:00-14:15 | 개회인사 | 장동훈 신부(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 | 동영상 | 사회교리주간 동영상 상영(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작) |
| 14:15-14:55 | 주제발표 | 한국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이은형 신부(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 14:55-15:00 | 휴식 | |
| 15:00-17:00 | 사 회 | 김 녕 교수 (서울정의평화위원회 위원) |
| 15:00-15:25 | 발표1 | 한반도 동아시아 핵 문제와 평화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 15:25-15:50 | 발표2 | 청년의 시각으로 본 한반도 평화-통일 이후 한반도 평화 박영득 대학원생(한국외국어대) |
| 15:50-16:15 | 발표3 | 「지상의 평화」 50년, 정전 60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나정원 교수(강원대) |
| 16:15-16:40 | 발표4 | 평화를 위한 가톨릭 신앙인의 실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 16:40-17:00 | 발표자와의 대화 | |
| 휴식 및 미사 준비 | | |
| 17:10-18:00 | 미사 | 김용태 신부(사회사목 교구장대리) |

목차

- 주제발표 : 한국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 5
- 발표1 : 한반도 동아시아 핵 문제와 평화 / 19
- 발표2 : 통일 이후 한반도 평화 / 31
- 발표3 : 「지상의 평화」반포 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 42
- 발표4 : 평화를 위한 가톨릭 신앙인의 실천 / 88
- 기념미사 / 96
- 부록 / 101
- <부록1> 「지상의 평화」 50주년 기념, 교황 프란치스코 연설문
- <부록2> 제3회 사회교리주간 행사 둘째날 일정표
- <부록3>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
- <부록4> 2014년 사회교리학교 교육일정표

■ 주제발표

한국 천주교회와 한반도 평화

이 은 형 신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들어가는 말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요한 14,27. 참조) 참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부활과 더불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며 또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찾아가야 하는 보화입니다.

2013년 올해는 한반도에서 발발한 치열하고 끔찍한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약속하고 맺어진 휴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구상 그 어느 민족이나 나라도 휴전상태를 60년이나 지속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전체제라는 불의한 현실 속에 크고 작은 분쟁과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세계적인 물결과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과거 역사를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인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한쪽 방향이 완

전히 가로막혀 섬나라 보다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부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경제적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상생과 공생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 길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현실 정치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역사가 이미 체험했듯이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현대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전쟁은 당사국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기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반포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를 향한 우리 교회의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질서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상의 평화, 특별히 분단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의 근본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화란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넘쳐흐르는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이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불리움 받은 교회는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제시해주신 평화의 풍성한 결실을 풍성

히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개념

2013년 11월 '세계 평화 포럼'에서 평화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143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순위에서 한국은 42위, 북한은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순위 상 차이는 있지만, 분단선을 맞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한 독일의 경우 기나긴 동서 화합의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수에서 1위를 기록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산물인 분단의 상황을 같이 경험했던 독일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 민족의 경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교류 협력의 부족함도 있고, 또한 독일식 통일을 이룰 만큼 경제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분단의 과정 중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상처와 아픔, 또 그로 인한 적대감은 독일과는 다른 치유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끔찍한 체험이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지난 60년을 증오와 반목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데올로기 논쟁은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념갈등의 중심에서 남북대치의 상황을 넘어서서 심각한 내부 갈등의 시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야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약육강식의 물리적 힘에 의한 질서유

지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혹은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위해 군비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적인 군비확장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미사일과 핵능력을 무한정 키워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과열 경쟁이 결국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 로마제국은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지향하였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기치아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주창하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며, 결국 로마제국 역시도 전쟁으로 인한 분열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마치 쉽게 깨어지는 유리그릇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산산조각이 날 수 밖에 없는 평화는 매우 위험한 평화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는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평화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힘을 키워 얻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평화를 ‘샬롬(*shalo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정의와 질서 그리고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내적인 충만함을 바탕으로

이웃과 이루어지는 참된 소통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선행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치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각 개체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치를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단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한국 교회는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활동

한국 천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2년 '북한 선교부'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부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 보다는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선교사 양성과 파견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북한 교회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각도의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주년 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북한 선교부'는 1984년 11월 '주교회의 북한 선교 위원회'라는 상설기구로 승격되었으며, 그 이듬해 '북한 선교 후원회'가 조직되어 인적,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 선교 위원회’는 기도운동과 계몽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고, ‘통일 사목 연구소’를 설립하여 북한 교회와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과 발간, 그리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987년 바티칸 대표단으로 파견된 장익 신부는 비동맹 각료 특별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중 천주교 신자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그 이듬해 부활 대축일에 그들을 교황청에 초청하여 교황님을 알현할 수 있도록 주선 하였습니다.

이어 1988년 6월에 북한에 ‘조선 천주교인 협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해 10월에는 평양에 장충성당이 건립되었으며, 10월 30일에 교황 특사 자격으로 장익 신부와 정의철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장충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를 계기로 북한 신자 20여명의 초청이 이루어졌고, 이후 북한에서는 자체 교리서와 기도서의 발간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서는 1995년 ‘민족화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그해 11월 뉴욕에서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3년 뒤인 1998년 평양 교구장 서리인 김수환 추기경을 대신하여 최창무 주교를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방북하여 평양에서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북한 교회와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9년 주교회의에서는 ‘북한선교 위원회’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하여 대북 선교정책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선교라는 다소 공격적인 교회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족화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회 내 활동도 많은 부분 변하게 됩니다. 선교적인 측면보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그 이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울 만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IMF상황에 내몰려 주변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한국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비로소 북한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울 대교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더불어 북한을 방문할 기회도 많아지고, 종교적 차원의 교류도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교구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도로 교회 관할권과는 별도로 북한의 각 지역을 세분하여 교구별 결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퍼주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종교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까지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민족적 동질성과 형제애를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경우 남쪽 방문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관계의 지속이 향후 통일시대 남북 통합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당국자 간의 갈등이 결국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대북 강경노선이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국민 정서도 싸늘하게 얼어붙어 감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민족 통합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남북관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벗어나 정치 갈등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사랑을 세속화하려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카시 열풍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처분된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 종북 논쟁은 남남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발전적 미래의 청사진이 제시되기 보다는 과거로의 회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에 기대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2 국가라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하는 대륙세력의 대결구도가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대 세력의 충돌의 장으로서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고단한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미일동맹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영토분쟁의 위기감을 점차 고조시켜가며 집단적 자

위권 행사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최첨단 무기 시스템들이 대륙을 향해 배치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력 역시도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내려져야 할 시점입니다.

가중되는 위기감 속에서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단의 땅 한반도가 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발신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남과 북 모두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 동반성장의 가능성과 더불어 평화로운 통일의 기운이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운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보탬일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1고린 5,18).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마태오 5,9 참조). 특별히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있어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힘을 통해 이루는 물리적 평화가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참 평화를 의미합니다.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외치는 '통일'은 바로 이런 평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평화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념논쟁이 극에 달해있다는 것입니다. 당리당락에 의한 편 가르기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복음적 가치를 세속화시켜 힘의 논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평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입니다. 이념 논쟁에 휘말려 완고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안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내부적인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줄 세우기를 조장하여 조화로움이 아닌 획일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 통일이 통합이 아닌 굴복이나 점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위기감 속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으면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6박7일 일정으로 ‘DMZ 평화의 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분단 1세대와 반공교육 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단 2세대,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는 분단 3세대가 함께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세대와 이념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보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념적으로 무장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평화’를 중심으로 안정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른 갈등에서 벗어

나 한반도에서 필요한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평화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점차로 심화되는 남남갈등의 요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단 문제가 민족 문제 이면서 동시에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의 과정 속에서 분단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왔고, 주변 열강들의 정치적 변수 역시도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연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이해 당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평화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재 지구촌 내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현실은 한 지역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평화가 아닌 인류 공동체가 전체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화의 연대를 촉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호소하시는 교황의 뜻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분쟁의 중심지 중 하나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주어진 보편교회의 기반을 바탕으로 분단의 땅 한반도가 평화의 발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신앙을 넘어 평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연대가 한반

도를 둘러싼 각 국, 각 정파의 이해관계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인도주의적 사랑 실천은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종교적 교류와 협력을 끊임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2)'는 것과,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마르코 16,15)'는 사명과 밀접하게 결부된 일입니다. 또한 민간과 종교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갈라진 민족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기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란 단순히 땅이 합쳐지고, 정치적으로 단일체제를 이루는 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통일이란 사람과 사람, 즉 마음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설사 물리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심각한 내부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 통합을 대비한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과 종교 차원의 교류에까지 큰 장애를 주고 있는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교회의 순수한 지원과 교류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톨릭 이념을 지닌 국제기구나 공동체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와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회의 관할권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교회 내 정책도 분명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여건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적극적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긴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토분쟁과 해상 경계선 문제를 빌미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냉전체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사이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든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지혜의 중심에는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중심에 서있는 한반도에서 큰 평화의 울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는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shalom)'을 선포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념적 편 가르기에 맞서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자적 소명을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교회의 목소리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미 50년 전에 반포된 회칙 '지상의 평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울림으로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 · 세미나

자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 5,9).”

■ 발표1

한반도 동아시아 핵 문제와 평화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3가지 시민비전

이 태 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

○ 존 레논, Give Peace A Chance

-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에 기회를 준 적이 있나?

○ 평화의 비전, 시민의 비전

-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지만 실패해온 억제위주의 군사주의적 접근
- 안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강요되어온 정책수단들
-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2.

○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한반도는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황

-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 2012년 12월 위성발사에 이어 3차 핵 실험
- 새 정부 이후에도 대화 단절, 개성공단마저 중단

○ 5년째 중단된 6자 회담

-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일의 핵우산과 MD의 악순환
- 각 국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의 강화

- 오래된 불신과 갈수록 확대되는 남북 격차가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
 - 경제적 격차, 군사적 격차, 민주주의의 격차
 - 북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반면,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보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
 -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 불량국가라는 불신 vs. 흡수통일 혹은 레짐 체인지에 대한 불안

- 후쿠시마 재난에도 불구하고 핵 의존도 커져가는 동북아시아
 - 바다 건너 핵무기, 내 이웃에 핵발전소
 - 역내 국가들의 핵발전/핵재처리 계획은 유지되거나 도리어 강화

-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기?
 -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잠재력이 협력 대신 갈등을 부르는 역설
 - 자원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갈등
 - 오래된 영토갈등과 역사논쟁의 재부상
 - 배제와 억제의 논리, 과장된 공포에 기반한 경쟁적인 군사화, 민주주의 후퇴

- 지역갈등구조의 일부로서 한반도 분단대결구조
 -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Pivot to Asia의 핵심축인 한미일군사동맹을 가시화하는 구실
 - 중국의 군비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 군사화를 촉발

3.

-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세가지 vision
 -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 핵 없는 동북아

- 태평양을 태평하게

○ 제안 1. 한국 전쟁을 끝내자!

- 남한과 미국의 선도적 평화적 포용적 조치가 필수
- 핵갈등 해소, 평화체제 형성, 교류협력 증진의 결합
- 흡수통일론, 컨틴전시 플랜의 폐지, 군사훈련 중지
- 합의의 존중, 대화의 복원, 포괄적 대화
- 민간의 역할 강화,
- NLL 갈등의 평화적 해결(작은 평화협정)

○ 제안 2. 핵 없는 동북아

- 북한의 핵무장과 경제 병진 노선 수용불가
- 20년간의 학습: 북한 핵무장과 제재의 악순환은 상호불신의 결과
-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핵무기고 증가, 확산우려 증가
- 북한의 핵포기와 한일이 의존하는 핵우산 포기의 교환
- 6자회담과 합의된 별도 포럼들-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의 활용
- 국제 핵군축 논의와의 결합: e.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 point
-plan
-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에 대한 일관된 문제제기.
- 후쿠시마의 교훈 확산: 반핵무기 운동과 탈핵운동의 결합

○ 제안 3. 태평양을 태평하게

-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의미
- 3개의 소삼각축과 1개의 대삼각축: 한미일동맹, 미일호주군사협력, 미일
인도군사협력 -> 미일 중심으로 한/호주/인도의 큰 삼각축
- 협력과 번영 vs. 냉전시대보다 더한 군사주의와 국수주의
- 동아시아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제주, 오키나와, 대만 주민의 평화적

권리

- △평화적 해결 노력, △무장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긴장고조의 예방, △지역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긴장완화, △시민사회의 이해와 교류 (GPPAC NEA 2012)

그리고, 평화국가만들기와 안보의 민주화

<참고자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 남한 NGO의 시각¹⁾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gasaki Global Citizens' Assembly for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Masao Tomonaga 조직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속한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한국의 몇몇 평화단체들과 함께 준비 중인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²⁾'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이 글은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핵무기 철폐를 위한 나가사키 국제시민회의 Nagasaki Global Citizens' Assembly for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개막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올해로 정전 60년을 맞은 2013년 초, 한반도의 위기는 가장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극적으로 고조되었고,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그리고 상호간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하반기 들어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되는 등 일촉즉발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로 일컬어지는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굴복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북한은 제재국면을 핵과 미사일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악순환의 구조가 한반도 평화를 꿈꿨을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대북정책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방향의 비현실적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비현실적 정책이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한반도 핵 위기 20 여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핵심은, 현재의 상황 악화가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 때문만은 아니며 실제로는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최종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비밀리에 대북 모의 핵공격 훈련을 했다는 것이 비밀 해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은 공식합의문서인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무시하고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던 미사일협상을 중단시켰으며, 북한을 "악의 축"이자 핵 선제공격 대상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 북한붕괴론에 집착하여 사실상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집권 후기에는 흡수통일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려 하였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북한의 행동 변화, 혹은 최소한의 상황 악화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제재와 봉쇄'가 아니라 '대화 와 협상'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보시킨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공동성명(93. 7. 19),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을(번역 수정 필요) 이끌어낸 94년의 제네바기본합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를(번역수정 필요) 2007년의 2.13합의와 10.3합의로 반전시킨 부시 행정부의 북미 직접대화 노력 등은 모두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들이다.

반면 북한의 광명성 2호, 3호기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규탄성명 채택, 북한의 반발과 2차, 3차 핵실험 등의 위기는 모두 대북압박과 제재가 정책

기조가 되던 시기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된 대북제재는 북한의 행동변화보다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최소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현상변경'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개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미 당국이 대화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번역필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인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정치적 수사가 늘 동반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인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코 외교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선제적인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 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상응조치 합의 등을 정책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강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체념적인 정서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애초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이 불가피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핵보유는 한미동맹에 대한 군사적 열세의 만회 및 군사적 억제력 강화, 강압 외교의 수단 확보, 국제적 위상 강화, 군비 조절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내부 결속과 체제 정당성 확보 등 다목적의 띠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동기와 목적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제안에는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비교적 명료하게 담겨 있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하였다.

이는 북한이 1992년 남북 사이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이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의 교환조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한반도비핵화를 넘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 철회를 의미하는 비핵지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은 사실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철회를 의미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 선제공격 독트린 천명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9.11사건 직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북한 같은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설사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비핵국가인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지난 수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설치를 비롯한 핵·억제력 강화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를 핵 폐기의 교환조건으로 내걸 토양을 만들어주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투발 연습의 중단 등이 있어야 핵 폐기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요구는 이익의 균형과 제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다. 더구나 비핵지대화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정책전문가들과 시민운동이 일관되게 권장해온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리적 현상변경'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미 역시 큰 현상변경 없이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었다.

대북 억지력 강화에 기반한 현상유지 정책은 지속가능한가?

오늘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적으로는 까다로운 대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수준의 제재를 총동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소극적이며, 군사적으로는 억제와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정전체제로 상징되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압박과 제한적 대화'를 통해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내걸고 다방면의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다는 '능동적 억지전략'을 채택했고, 이를 위해 탐지-식별-결심-타격 체계로 이뤄진 '킬 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방어체제(MD)로 구성된 '확장 억제'의 지속적인 유지·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3자간의 MD 구축 추진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 미일,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의 빈도와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혹은 한

반도 평화에 도움을 줄 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연간 약 300억 달러)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약 150억 달러)의 2배, 북한 군사비를 30억 달러로 추산하더라도 무려 10배에 달한다. 무기체계의 성능과 군사 훈련의 수준도 한미양국의 연합전력이 우세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대북 억지력만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만 재촉할 뿐이다.

무력시위를 동반한 대북 억지 강화는 우발적 무력 충돌 및 확전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억지 강화를 위해 군비 증강을 지속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핵보유의 유력한 배경과 동기는 한미동맹에 대비한 군사력의 열세를 핵보유로 상쇄하겠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MD 구축도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대비 효과’ 논란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은 MD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효용성을 떨어뜨려 개발 동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MD는 미중간의 전략적 불신을 격화시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 중국의 안보 우려를 자극해야 중국이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 보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비롯한 군비증강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3자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 외교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위해 북한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또 미국이 한국에게 MD 참여 및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요구할수록 한국 내의 대미 비판여론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전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체제는 점점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축되어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현상 유

지를 염두에 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 되는 정전체제의 해소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재검토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 변경,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능동적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보다도 기존 합의들의 계승과 발전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0년의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2007년 남북 사이의 10.4정상선언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9.19공동성명의 유용성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9.19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립,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의 포괄적 접근법이 문제 해결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첫째, 2005년 9.19공동성명을 기초로 하되 이를 근원적·포괄적·균형적 원칙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9.19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9공동성명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을 본질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를 상호 연동된 동시적 목표로 삼고 접근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협상에서는 9.19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반수단에 대한 논의 및 9.19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협력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시와 더불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평화체제 논의는 9.19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6자회담 개시와 더불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러·4

자회담의 동시 추진은 원칙의 문제로 수용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1996년에 한미 양국의 공동제안으로 추진된 4자회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의제와 주요한 쟁점에 대한 당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미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6자 회담의 다자간 대화와 더불어 북미간 양자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양자대화의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북미는 고위급대화를 제도화하고, 경제제재 완화를 비롯한 적대관계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북미수교에 도달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의 합의사항인 미국 대통령의 방북 약속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얽매어 북의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킨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의 안정은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동력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식량과 비료를 포함한 대북인도지원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전반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확고한 기초 위에서 서해 평화정착을 비롯한 중요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 발표2

통일 이후 한반도의 평화

박 영 득

1. 왜 통일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어는 쉽게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상기시킨다.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맥락과 평화라는 하나의 가치가 주어지면 남한과 북한의 대립과 통일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분단 상태를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도 평화로워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일궈낸 통일한반도 역시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화한반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천명하고 있으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리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있어 (통일에 찬성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화통일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KBS 통일의식조사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같은 연구들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꾸준히 조사해오고 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과 통일이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전히 다수이기는 하나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점차 북한과 북한주민을 타자, 또는 타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대와 같은 젊은세대에서 가장 강하다(정하운 2012, 5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히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겠으나 통일 이후의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청년층의 반대비율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은 청년층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에 비해 불안감과 부담감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청년에게 평화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평화로운 분단 상태의 영구고착화 역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대결적인 분단 상태 보다는 훨씬 평화로우며 부담도 없는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분단 상태의 영구고착화보다도, 심지어 지금의 대결적인 분단 상태보다도 더욱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후 남북의 사회통합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가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는 통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만일 지금시점에서 통일이 된다면 약 60년간의 분단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남한주민과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사회화된 북한주민과 하나의 울타리에서 생활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이 단순히 분단 상태가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화통일은 휴전선 철조망의 철거나 어떠한 합의문에 양 정상 서명하는 단계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광의(廣義)의 평화통일이란 제도적, 정치적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상태를 극복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달성되어야 한다(홍익표·진시원 2004).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북한주민과 하나의 공동체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201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에 대한 관용적이지 않은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나 자녀가 탈북자와 결혼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약 38.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전혀 괜찮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인 답변은 10년 전의 같은 조사에 비해 4.3% 증가했다(12.9% →17.2%). 또 탈북청소년들에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를 물었더니 3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조사를 수행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김신희 연구원은 이를 “탈북자를 복지의 일방적인 수혜자 정도로 여겨 사회적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선 결혼관련 질문에서도 특히 20대는 42.5%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전체평균(38.5%)보다 높은 수치였다. 20대의 부정적 의견이 높은 이유는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탈북자를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서 소외받는 탈북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 중 하나는 북한주민을 하나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통일 이후에는 남한주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현재 탈북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이후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며 그러한 부담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남한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친 북한주민의 ‘남한주민과는 다른’ 모습에 의해 차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경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부 일본 우익단체의 과격한 반대운동이 통일 한국에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통일은 지지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통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일 이후의 사회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2. 배타적인 소통의 문화와 통일 한반도의 평화

1) 재특회를 통해서 본 일본의 사례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 생활을 평화로이 영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나 남한주민이 의식적인 측면이 준비되어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커다란 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북한주민을 남한주민이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통일 이후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할 여러 사회갈등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의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활동과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사례는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그리고 제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이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_{在特會})는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의 특권에 격렬한 방식으로 반대시위를 펼치는 모임이다. 이들은 조선인학교나 시내에서 “조선인은 죽어버려라!”, “바퀴벌레 같은 조선인!”과 같은 과격한 말로 시위를 펼쳤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조선인은 합당한 권리도 없이 일본에서 갖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암적인 존재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일본이 외국인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들의 조직은 점차 커져나갔으며 일본의 사회문제로도 대두되었다.

조직의 이름 그대로 이들의 활동은 주로 재일 조선인들의 특권에 반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점차 중국인 등 일본 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너무나

도 무지하며 자신들과 같은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일본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들의 행위는 애국이며 자신들은 애국자라는 강한 사명의식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의견이 소외되어왔다는 강한 피해의식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제일 조선인에 대한 주장은 언론 등을 통해서 비판받고 있는데 재특회는 이러한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이 조선인들에게 장악되었다든지 좌익에게 장악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타자로부터 느끼는 공포와 애국심이 결합하여 강한 불신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기에 이들의 행동은 한국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다. “조선인은 죽어라”와 같은 적의(敵意)에 가득찬 말로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대체 누구이길래 이토록 커다란 공포와 증오의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인가? 재특회 회원들이 잘 조직된 어떤 극우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극우정당이나 별도의 조직으로부터 충원된 것이 아닌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나본 재특회 회원들은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분노하고 심지어 ‘이대로는 일본이 위험하다’는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출신으로 보더라도 평범한 회사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 어떠한 정치조직에도 연관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야스다 고이치는 취재과정에서 재특회 회원들의 연설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설피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보통의 일반인의 것이며, 그들로부터 어떠한 정치조직에서의 활동 경험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야스다 고이치는 자신의 취재결과를 정리한 『거리로 나온 넷우익』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 인터뷰에서 “재특회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답했다. 격렬한 혐오의 마음을 가

진,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품어져있는 혐오의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 야스다 고이치는 이에 대해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발전 과정에서는 돈이나 권력을 잃을 기회가 거의 없는 수십만 명의 프티부르주아가 이제는 나치 관료 체제의 일원으로서 부와 특권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상류계급을 압박해 상당히 큰 몫을 얻어내었다는 사실이다. 나치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과 정적에게서 빼앗은 일자리가 주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많은 빵을 얻지는 못했지만 ‘구경거리’를 얻었다. 이런 가학적인 구경거리, 그리고 나머지 인류에 대한 우월감을 주는 이념은 그들에게 감정적 만족감을 안겨주었고, 이 만족감은 그들의 삶이 경제적·문화적으로 빈곤해졌다는 사실을 적어도 당분간은 별충해줄 수 있었다(Fromm 2012, 228)³⁾.

즉, 나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어왔으며 재특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고이치 2013, 321).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증오가 개별 시민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분출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재특회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불안이 자아낸 위기감이 자아낸 것일 수도, 개인의 기질일 수도, 아니면 어떠한 경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불문하고 이들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다는 점은 과연 우리사회는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의 근간인 증오로부터 자유로운가 하

3) 야스다 고이치(2013, 320)에서 재인용.

는 의문을 갖게 한다. 만일 우리 사회역시 이러한 증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통일이후의 사회문제는 마치 일부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 일간베스트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재특회에 비교되는 것은 일간베스트(일베)라는 유머 커뮤니티다. 일베는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의 게시판에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디시인사이드 외부에 만든 일종의 저장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일간베스트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였다. 주요 선거국면을 거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극우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조롱, 호남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등 몇몇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일베는 단순히 하나의 웹사이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혐오담론은 일베 외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즉 일베는 이미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일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든, 이들이 가진 강한 혐오가 적지 않게 사회에 퍼져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커다란 사회문제이지만,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생각해보면 더욱 큰 문제다. 재특회의 사례에 비춰보면 통일 이후 많은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베가 하나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왜 하필 일베에 모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베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이후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문가와 언론에 의해 시도되었다. 혹자는 이를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도 하고 역사교육과 대학사회의 붕괴를 원인으로 꼽기

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집단극단화(group polarizarization)으로 일베의 행위를 설명한다(경향신문 2013/05/22). 즉 비슷한 사람들 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더 극대화되며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갖는다는 것이다(Sunstein 2001). 그러나 이들의 설명은 ‘이들이 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가?’나 ‘이들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이들이 하필 ‘일간베스트’라는 하나의 웹사이트에 모였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불관용적인 행위들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인터넷과 SNS의 경우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이용자들의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내놓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지형 하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이용자가 설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토론은 반대의견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베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서 일베 이용자들이 토로한 기존 커뮤니티에서의 배타적인 행동, 즉 보수정치인을 지지한다거나 보수정당의 정책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 경우 ‘알바’로 몰아세우는 행동들도 이러한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신들 역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당 알바’, ‘수구꼴통’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대안적 공간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베 이용자들이 ‘트위터’, ‘오늘의 유머’, ‘MLB파크’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 이용자에게 대해 쏟아내는 강한 혐오감의 표현은 한편으로 이들이 과거에 받았던 ‘소수의견자’로서의 피해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자신의 의견을 온건하게 표현할 인터넷 공간을 상실한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일견 냉전적 사고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즉 흔히 말하는 ‘종북몰이’와 ‘수구꼴통 몰이’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만 다를 뿐, 내적으로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언론을 통하여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다시 말

해서, 일베의 공격적인 언어는 인터넷의 주요한 여론집단의 배타적 속성에 의해 자극되어온 것이며 '보통사람'의 얼굴을 한 인터넷의 주류 여론집단은 현재 일베라는 일탈적인 의견집단의 탄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배타적인 소통문화는 결국 격렬한 혐오발언을 내뿜는 일탈적 집단을 만들어 냈다. 만일 그렇다면 혐오발언을 내뿜는 일탈집단의 탄생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게 된다. 이질적인 의견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공격이 계속된다면 일탈적 의견집단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양극화되고 상호배타적인 소통문화에서 의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당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과의 화합은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다. 또 재특회의 사례에서 재일 조선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주민은 우리사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큰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재특회나 일베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 배외주의(chauvinism)로 분출된다면 통일 이후의 사회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통일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였으나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것이 단지 인터넷 공간에서만 의 문제로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가상공간이기는 하나 인터넷 공간은 시민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함께 놀이를 즐기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사회화 기관(socialization agency)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상의 배타적인 소통문화를 방지한다면 이를 통해 사회화 될 미래세대 역시 배타성을 간직한 채로 통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배타적인 소통의 문화가 상이한 의견집단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 극단적인 의견집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지 재특회나 일베와 같은 일탈적인 의견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한국사회의 그늘진 곳에 숨어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배타적인 소통문화와 의식의 개선 없이 통일을 맞이한다면 자칫 분단상태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 역시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쉬운 일은 아니었으며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이영란 2005). 약 한 세대 간의 분단경험을 가진 독일이 통일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던 우리 한반도의 통일 이후는 더욱 험난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합의나 주변국의 협조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정치적 합의의 결과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되어야 추구될 수 있는 목표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상황은 물론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젊은 세대로부터 통일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도 해야 하지만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문화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정하윤. 2012.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 민주시민교육학회보』제13권 2호.
- 홍익표·진시원. 2004.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오름.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민주주의: 총선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회보』제14권 2호.

윤영철, 송현진, 강기호, 박민아. 2010.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토론의 조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7권 2호.

이민웅. 2005. “숙의적 방송 커뮤니케이터 모델: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보』제20권 1호.

이영란. 2005.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포커스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39집 1호.

安田 浩一. 2012. ネットと愛國:在特會の闇を追いかけて. 김현욱 역. 2013. 『거리로 나온 네티즌』서울: 후마니타스.

Sunstein, Cass. 2001. *Republic.co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경향신문. 2013/05/22

■ 발표3

『지상의 평화』반포 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나 정 원 (강원대 정외과 교수, 정평위 위원)

목차

1. 1953년 한반도와 1963년 가톨릭교회, 그리고 2013년
2.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 2-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적 갈등
 - 2-2.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지속적 분출
 - 2-3. 평화주의와 군사주의의 퇴행적 교차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대안
 - 3-1. 사회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지향
 - 3-2. 국가주의-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보편주의의 실현
 - 3-3. 군사주의를 억제하는 평화주의의 실현
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대안과 교회의 가르침
 - 4-1. 평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4-2. 평화를 향한 길, 통일을 향한 길
 - 4-2-1.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지향
 - 4-2-2.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보편주의의 실현
 - 4-2-3. 군사주의를 억제하는 평화주의의 실현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가르침의 실천

2013년 한국 천주교회는 3번째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평화’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의 지향 가운데 ‘평화’는 아마도 거의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2013년은 사회교리의 여러 문헌 가운데 ‘평화’를 제목에 담고 있는 『지상의 평화』가 반포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6.25 이후 분단이 고착화 되는 계기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2013년 사회교리주간에 정전협정 60주년과 지상의 평화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일은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올해 세미나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념적인 대결, 국가-민족주의적인 대결, 그리고 군사적인 대결이라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대안은 현실 속에서 엄연한 한계를 갖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분석은 가능해도 대안은 실천가능성을 매우 낮게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적 분석과 대안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교리에서 제시하는 실천방안들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1953년 한반도와 1963년 가톨릭교회, 그리고 2013년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정지와, 그리고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위해서,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停戰協定)이 체결되었다. 1953년은 한반도 냉전 정착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북조선에서는

1946년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개혁이 완료되어 북조선은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조국을 이루려는 남쪽의 다양한 노력과 미소 양국의 회담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한반도는 냉전의 실험장이 되었고, 6.25 이후에 냉전의 틀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따라서 지금 2013년의 한반도 상황은 '신냉전'의 상황이 아니라 냉전 그 자체이며, 1945년 이후 형성된 냉전 구도는 한반도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역학구도는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혼란스럽게 형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1963년 4월 11일,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에 대하여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반포하였다. 1945년 이후 전 세계의 상황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게 전개되었다. 특히 1960년대의 상황은 세계전쟁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었다. 1962년 10월 약 1주일간 진행된 소련과 미국사이의 쿠바사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교회의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게 한 전 세계적인 배경은 1953년 전 세계의 대결인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에도 꾸준히 형성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는 쿠데타, 공산정권, 군사정권의 수립과 붕괴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중동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국경분쟁과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했고, 동유럽에서는 1956년 헝가리와 체코의 민주화 운동, 1961년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치가 있었으며, 프랑스의 핵실험과 알제리 사태, 키프로스 문제, 유로코뮤니즘의 움직임, 또한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버마 등지의 내전과 갈등, 중소분쟁,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의 티벳 점령 등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1960년과 1961년 민주화운동과 쿠데타가 발생하여 제2의 6.25 위기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1963년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

한 호소를 하였다. 1961년 『어머니요 스승』은 『지상의 평화』의 전조로서 모두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이다. 그 이전의 사회교리 문헌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교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1937년의 『하느님이신 구세주』, 1931년의 40주년과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인 『새로운 사태』이다. 1963년 이후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운동, 1968년의 체코 민주화 운동 또한 이른바 '68사태'의 전 세계적인 전개 등도 평화를 위협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요한 사회교리 문헌들이 1960-7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1965년 『사목헌장』, 1967년 『민족들의 발전』, 1971년 『80주년』, 『세계정의』 등의 문헌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상의 평화』는 평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교리의 모든 문헌은 평화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목헌장』의 평화 역시 『지상의 평화』의 평화와 마찬가지로의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1960-7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2013년 지금의 시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그리고 1963년 『지상의 평화』 이후, 냉전의 상황을 그대로, 아니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논의는 동북아 평화와의 연관 속에서 수 없이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주로 2010년 이후에 집필된 사회과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을 진단하고 대안들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과학적인 분석과 대안도 이데올로기 대결의 냉전과 국가이익 중심의 국제정치 현실에 막혀 좌절되고 있는 2013년이다. 이러한 2013년에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제시하고 처방하는 평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성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을 다짐하는 일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우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2.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한반도는 동북아 속에서 존재하며, 동북아는 세계의 한 지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에는 전 세계 강국 모두가 국경을 맞대고 이익을 다투고 있는 냉전 지역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세계 평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적 현실에 대한 주요한 분석개념으로 민주주의 Democracy와 사회주의 Socialism의 갈등, 국가주의 Statism(Etatism)-민족주의 Nationalism의 지속적 분출,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의지들의 결집으로서 평화주의 Pacifism와 이념, 정치체제, 국가의 수호를 위한 군사주의 Militarism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적 갈등

한반도 평화 논의가 한반도 통일 논의와 동격은 아니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 평화를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현상의 극복과 변화를 원하는 경우 통일이라는 적극적 개념이 항상 등장한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한 당사자와 주변 4강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냉전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남한과 일본,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를,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체제를 지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현실적인 융통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이념의 냉전적 갈등 현실은 인정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도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위구르, 티벳 등 소수 민족의 지역적 독립 세력과 천안문 사태 이후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무자비한 폭력과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내정불간섭의 논리로 일체

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다. 내부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 체제 부정의 탈북자에 대한 처리, 핵개발 정당화의 논리 등은 모두 이념과 체제 유지이다. 단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의 수용으로 남한, 일본, 미국과 경제적인 '민주주의'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후에도 과거의 정치문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의 냉전적 갈등 상황은 한반도 평화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1948년 한반도를 나누어 성립된 민주주의 국가이다⁴⁾. 하지만 두 개의 한국에는 두 개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로 출발하였다. 남한은 민주화의 계기를 지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넓혀가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원한다 해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통일을 상상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이념은 아니다.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우리의 이념이다. 통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절제한다 해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 존중과 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의 포기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절제된 형태로 만들어 절제된 자유민주주의와 수렴한다 해도 구체적인 현실적 형태를 설정하기는 매우 힘들다. 현재로서 통일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라는

4) 나 정원, 한국정치와 환경정치, 집문당, 2009, 90-92쪽.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는 작업,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이 통일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되는 셈이다.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특히 경제적 계급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 가운데 강조점을 달리 함으로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름도 달라진다.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보다 평등을 더 강조하는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등의 표현을 선호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가치가 쇠퇴한 이후에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 성장과 분배, 제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

2-2. 국가주의-민족주의 지속적 분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문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위상이 추락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통하여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문화가 아닌 무력에 의해 유지하면서 국가주의, 또는 한족 민족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소수 민족을 포괄하려는 한족중심의 국가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민족주의의 폐쇄성이 강하며, 단일민족 의식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의 불철저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맹목적인 애국주의라고 평가 받을 수도 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의 역사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금지와 제2차 대전의 피해국가라는 의식을 중첩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은 매우 강한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민족주의는 20세기 이후 이념의 냉전적 갈등 상황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분출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토분쟁의 경우, 독도 문제에서 한국과 북한은 일본에 대해 공조한다. 최근의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에 대해 공조하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공조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공조 중간에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일본의 우경화, 집단 자위권 문제 등에서 중국, 북한, 한국은 모두 매우 강한 국가주의-민족주의의 표현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면서 일본에 대해 공조한다. 역사 인식,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의 든든한 후견자이다. 이와 같은 현상 모두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에는 불안 요소,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매우 사소한 계기로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2-3. 평화주의와 군사주의의 퇴행적 교차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국민이나 정치지도자 모두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다 평화를 원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냉전적 이념과 국가주의-민족주의가 바로 전쟁의 명분이다. 각국은 이념, 체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평상시 전쟁의 위기를 잊고 경제협력, 교류, 관광, 심지어는 군사교류까지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명분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이다.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와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는 군사주의의 교차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퇴폐적으로, 퇴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동북아와 한반도만큼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고 각국의 현실 이익에 따른 동맹-교류 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¹⁾. 주변

1) 동북아에 현존하는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부록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한미, 미일

4강의 국방정책과 구체적인 군사력은 2012년의 국방백서(14-20쪽 참고)에서 볼 수 있다. 엄청난 공포의 위협이 한반도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주변4강의 경제력 대비 국방예산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국방비 비교

| 국가 | GDP (억 달러) | 국방비 (억 달러) | GDP 대 국방비 (%) | 병력 (천 명) |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
|-------|---------------|---------------|---------------------|-------------|-----------------------|
| 대한민국 | 10,147 | 257 | 2.52 | 642 | 529 |
| 미 국 | 145,000 | 6,936 | 4.77 | 1,569 | 2,250 |
| 일 본 | 54,600 | 544 | 1.0 | 248 | 426 |
| 중 국 | 58,700 | 764 | 1.3 | 2,285 | 57 |
| 러 시 아 | 14,800 | 419 | 2.84 | 956 | 301 |
| 북 한 | 192 | 60 | 31.00 | 1,190 | 242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2」(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2. 3.) 등 관련자료 종합. 북한 자료는 KDI, 국방비 자료는 현대경영연구소, 병력수는 2012년 국방백서

미국의 국방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국방비 총합보다 3배 이상 많으며, 북한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사실이 주목된다. 군사주의를 위한 엄청난 재화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군사력은 부록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남북한과 주변 4강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여, 흔히 한미일과 북중러의 남북방 3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 한중, 한러 군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국방백서2012, 76-78쪽), 전통적인 남북 삼각관계의 냉전적 대결은 경직된 상태에 있지 않다.

동맹, 조중, 조러, 중러 동맹조약의 전문은 부록3을 참고. 여기에 한일 동맹은 빠져 있으며, 미국은 2008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러 동맹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교류협력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무기는 핵무기이다. 부록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4강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핵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나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나라로 분류되며,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명분은 대내적으로는 냉전적 이념 구현을 위한 체제 안정과 재래식 군사비 지출의 감소를 통한 경제발전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통한 미국의 핵위협을 들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대안

이상에서와 같이 한반도 평화의 현황을 동북아 평화와 관련하여 진단해보았다. 이러한 진단과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지향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중국에 대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택하라는 요구는 급진적인 주장이며, 지금의 소극적 평화를 떠나 전쟁을 초래하는 발상일 수 있다. 정치적 이념의 선택요구는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군사행동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사회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라는 요구는 소극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남북 당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은 해방이후부터 민주주의라는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해오고 있다²⁾.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인민주권, 권력통합을 기본으로

2) 나정원, 앞의 책, 268-270쪽

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이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북한은 국유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경제, 사회주의체제이며, 남한은 개인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이다. 민족주의의 경우도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중요하다. 양측이 제시한 어떤 통일론에도 이와 같은 정치경제 이념을 수렴하지는 내용은 없다. 이제까지의 모든 통일론은 무력에 의한 이념의 통합이나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을 주장하는 두 가지 통일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무력에 의한 이념의 통합을 주장하는 통일론이다. 여기에서 정치경제 이념은 어느 한쪽의 승리와 패배로 결말이 나는 경쟁관계에 있지, 타협, 수렴의 대상이 아니다. 남한은 남한의 방식대로, 북한은 북한 방식대로 통일을 주장한다. 각각이 주장한 통일론은 상대를 압도하려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정치적, 군사적이었으며, 모두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냉전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이념대결의 과정에서 북한은 민주기론, 통일전선론, 남조선해방론, 남조선혁명론 등으로, 남한은 북진통일론, 멸공통일론, 승공통일론 등으로 맞섰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 각각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이념대결의 산물이었다. 북한은 남한에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필요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남한은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면도입을 신념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론들은 체제우위경쟁 논리이며, 냉전적이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통일론이다. 여기에서 정치경제 이념은 상호 인정되는 공존관계에 있으며, 평화적인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북한이 세 차례(1960.8.14, 1980.10.10, 1991.1.1) 제안한 연방제,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본 내용(7.4 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인

정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표현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 조선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최고민족위원회를 두어... 정치문제를 제쳐 놓고라도....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함께 문화교류를 널리 실시하여....(1960년 연방제),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7.4 공동성명, 2, 3항),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양측의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6.15 남북공동선언, 2, 4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10.4선언 2항) 등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반을 두는 통일론이다.

남과 북이 둘로 공존하는 평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분명하게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전쟁이 없는 지금의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에서도 남과 북 모두 각각의 내부에는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며,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한 평화의 추구도 남북 당사자만의 대화와 협력 뿐 아니라 주변 4강과의 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냉전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로 지향하려는 노력은 그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범주의 주장은 학술적 차원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북한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의 이념적 갈등으로서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한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3-2. 국가주의-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보편주의의 실현

국가주의-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실현이 주장된다. 물론 여기서 보편주의는 그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 등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보편주의

이다. 국가주의-민족주의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되면서 양자간, 다자간의 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 보편주의는 구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안보, 국방, 정치적인 측면의 경성적인 동맹과 협력을 제외한 분야의 연성적인 교류와 협력은 경성적인 동맹을 완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1차 당사자인 북한과의 연성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대조차도 이념과 체제의 위협요소로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도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가 군사, 안보, 정치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을 받아들여도 국가주의-민족주의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안보공동체³⁾, 군사공동체, 정치공동체의 구축을 제시하는 일은 구상단계부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를 동북아에서 단기간에 실현하려는 환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의 교류 확대를 통한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로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⁴⁾. 이러한 대안들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러한 대안들의 실천 주체는 국가지도자나 정치지도자가 아닌 민간인, 기업인 즉 일반시민, 여성 등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상대적으로 더 보장받을 수 있다⁵⁾.

3) 엄상윤.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국제관계연구』, 2010 15(1), 45-76쪽.

4) 김종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통일정책연구』, 2011 20(1), 185-212쪽: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이것을 동아시아 공동체, 아태지역체제 내에서 네트워크화 하여 ‘네트워크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특, 이상호. 경제통합 기반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0, 331-346쪽, 이용규, 장병권.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관광의 철학적 역할. 『관광학연구』, 2012 36(10), 37-59쪽, 소병천.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09 54(2), 119-142쪽 등을 참고.

5)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평화체제구축이 중요하다: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동향과 전망』, 2010, 183-214쪽, 한반도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 저지, 남북분단 해소, 군사문화의 평화문화로의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동북아와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소정. 동아시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2009, 263-295쪽. 동아시아에서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제안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핵심에 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 성과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성격의 대안 제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연성분야 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이런 제안들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이고 점진적이며,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경제분야의 교류는 평화체제 구축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 분야의 단계적, 점진적 협력 확대⁶⁾가 주장되고, 북한과의 내부거래 설정을 통한 북한지원⁷⁾이 제안되며, 남북한 경제교류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⁸⁾고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익의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 제안⁹⁾은 매우 포괄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관광, 문화의 차원에서 평화지대Peace Zone의 건설¹⁰⁾, DMZ의 활용 등도 제시된다. 분단의 상황에서 이러한 대안들의 실천 주체는 국가의 통제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북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기업인, 일반시민, 여성, 종교인 등이 될 수 있다¹¹⁾.

여기서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이것의 확대로서 통일을 모색해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모든 분야가 정치, 안보, 군사와 연결되어 있

6) 장영권.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평화연구』, 2009 17(1), 137-172쪽.

7) 김용훈.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법학연구』, 2011 22(1), 79-129쪽.

8) 이일영.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동향과전망』, 2012, 160-192쪽.

9) 서보혁. 이익균형론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체제 재론. 『통일정책연구』, 2010 19(1), 1-22쪽.

10)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국제정치논총』, 2011 51(3), 105-134쪽.

11) 시민민주주의를 통한 평화-통일 운동을 주장하는 조대엽.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2010 49(1), 159-18쪽, '민족', 민중공동체를 통한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재정.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안병무의 민중공동체. 『신학연구』, 2011, 59, 144-172쪽, 분단의 현실에서 여성들의 피해, 여성성, 여성안보를 드러내는 안김정애. 세계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한국의 여성안보. 『젠더와사회』, 2006 (5), 53-92쪽, 이영애. 분단된 한반도의 여성성 : 그 일반성과 특수성. 『아시아여성연구』, 2006 45(2) 85-114쪽 등을 참고. 또한 '기독교시민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한 형제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 참가를 실천하는 입장은 백종국.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사상』, 2006, 49(8), 252-270쪽, 서광선. 통일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기독교사상』, 2012, 80-92쪽: 88선언: 선교적 사명을 위해 동족에 대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남북정부에는 남북의 민간교류 확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외국군 철수 및 군비축소와 핵무기 철거, 한반도의 비핵화 요구: 88선언에 관해서는 이유나. "88선언 전후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통일운동과 제 세력의 통일운동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2010, (32), 263-296쪽을 참고. 가톨릭이나 불교 등 다른 종단의 한반도 평화운동은 차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기 때문에 환경이 비정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은 계속 유지하게 하되, 폐쇄성을 완화시켜 외부로부터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재정과 환경과학을 지원하면서 국제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한다. 현실적으로, 남북 당사자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키고, 남한의 역할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환경협력의 효과가 사회전반에 파급되어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¹²⁾.

3-3. 군사주의를 억제하는 평화주의의 실현

군사주의와 평화주의가 퇴행적으로 교차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실에서 군사주의를 가능한 억제하고 평화주의로 지향하는 일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동북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가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냉전 유산의 지속으로 한미일, 북중러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냉전적 동맹관계 속에서도 각 국은 군사, 안보 분야에서까지 이해관계에 따라 교류 협력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단은 매우 중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 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이 평화와 통일로 직결된다고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먼저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4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갖는 입장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현실에서 동북아 안보협력 관계의 구축 양상을 다자 안보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전망해본다. 이어서 한반도 통일에 주목하여 남북 평화협정, 통일방안, 핵 문제의 해결 등의 순서로 사회과학적인 대안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한반도 주위의 4강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12)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정원, 앞의 책, 263-273을 참고.

다. 미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한국과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인 협력을 촉구하기도 한다. 일본은 주변적이었으나 최근 자신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면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한반도를 관리하기를 원한다. 러시아는 주변적이었으나 최근 자신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상이 주변 4강의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역학이다.

먼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한국은 이것을 통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¹³⁾. 중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를 지지한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확보를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주의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놓고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중미가 협력관계일 경우, 남북은 협력하지만, 경쟁관계일 경우 남북은 대립한다. 중미 관계가 협력적일 때 중국은 북한을 소홀히 하고, 경쟁 관계일 경우 북한을 지지한다¹⁴⁾. 결국 한국은 중미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중미관계가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조중 동맹의 강화를 막는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중미관계가 경쟁관계이고 냉전 양상을 보이는 시기¹⁵⁾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남북의 상호의존의 확대 노력을 강화하기도 힘들고,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힘들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의 안보우려를 고려하면서 동북아에서 번영과 평화의 조정자로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발휘하

13) 필영달.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아세아연구』, 2012 55(4), 285-314쪽, 하상식.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전략연구』, 2011, 97-126쪽을 참고.

14) 이정남.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평화연구』, 2011 19(1), 125-154쪽, 광덕환. 중미관계변화와 한반도 평화. 『사회과학연구』, 2012 23(3), 27-42쪽을 참고.

15) 김일수, 이동희.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1 32(2), 257-283쪽, 김정배. 중미화해, 한반도정치, 그리고 냉전체제. 『미국사연구』, 2012 36, 205-245쪽을 참고.

여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⁶⁾. 중국과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이 의존관계를 다른 측면에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¹⁷⁾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미 일변도나 대북 강경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자신의 극동 지역 발전과 외교적 역할 확대에 필요하므로, 중국, 북한, 한국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군축을 제안하기도 한다¹⁹⁾

그래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 축으로 형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지난 60년간 안보, 경제를 위해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서로의 전략적 이해 충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전쟁주의 입장은 한미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지지도 못 받는 상황이며,

16) 남창희, 이원우.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국제관계연구』, 2011 16(2), 5-36쪽.

17) 광슈위, 주밍아이.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09 2(2), 93-118쪽.

18) 리단, 전형권. 중국의 대 남북한정책의 지속과 동학. 『정치정보연구』, 2010 13(1), 95-119쪽.

19) Vladimir N. Kolotov. Russia's Assessment of Regional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 Historical Background and Recent Developments. 『전략연구』, 2010 17(2), 84-122쪽. Vladimir V. Evseev. 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 Russia"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전략연구』, 2007 14(2), 79-119쪽, 장덕준. 러시아의 채부상과 동북아. 『이사이리뷰』, 2012 2(1), 63-93쪽 등을 참고.

20) William B. Brow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East Asia in the 21 Century. 『KINU International Colloquium Collection』, 2008, 13-40쪽. 한미동맹의 근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미 인식 변화에 기인할 뿐이며(이기완. 1990년 이후 한국의 정치동학과 한미동맹. 『국제관계연구』, 2011 16(1), 5-29쪽을 참고),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경험적 조사도 있다: 박준성, 유재의. 한국인의 동맹인식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안보대안 가능성. 『전략연구』, 2008 15(3), 126-151쪽.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을 포함하는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²¹⁾.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군사 분야 교류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도는 다소의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안이 다자안보협력체제이다. 그래도 양자 동맹관계에 의한 군사주의는 유효하지만²²⁾, 다자안보협력체제는 군사주의를 완화시켜 평화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러시아, 한국, 일본과 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중국과도 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안보구조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속성이 지배적인 가운데 탈냉전적 속성이 교차되는 중복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자 동맹을 병행, 보좌하는 다자기구의 창설 등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²³⁾.

한국도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을 수용하는 전략을 소홀히 할 수 없다²⁴⁾. 양자간 군사동맹을 보완하는 기제로서 6

21) 양국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도력이 결합되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상호신뢰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 서보혁.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2008 48(2), 127-149쪽,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 한일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Hideshi Takesada.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전략연구』, 2006 13(3), 54-67쪽.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일협력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Yoshihide Soeya.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 : From Yukio Hatoyama to Naoto Kan. 『전략연구』, 2010 17(2), 43-67쪽.

22) 조중 동맹, 한미동맹, 미일 동맹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동맹 당사국들은 유사시 양자 간의 전략적 이해를 중시할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Alan D. Romberg.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2009 and Beyond. 『전략연구』, 2007 14(2), 7-51쪽을 참고. 그러나 예를 들어 미일, 한미 간에 같은 전략적 가치에 대해, 예를 들어 영토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이 충돌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23) 김갑식.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통일문제연구』, 2009 21(2), 1-42쪽.

24) 이남주. G2시대와 한반도. 『황해문화』, 2012, 122-138쪽. 김갑식.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2012 15(1), 124-156쪽: 한미 동맹의 기축위에

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실천하는 실용주의가 바람직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²⁵⁾.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나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개념으로 집단안보, 공동안조, 협력안보 등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해볼 수도 있다²⁶⁾. 이러한 대안은 동북아 안보협력회의, 또는 한반도안보협력회의라는 기구의 창설로 확대될 수 있다²⁷⁾.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성패는 국가중심의 레짐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중심의 가버넌스 차원에서의 확대와 연대에 달려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²⁸⁾

다자안보협력체제 모두 우리로서는 평화체제를 넘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²⁹⁾. 중국도 현상유지를 통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유지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³⁰⁾. 평화협정은 군사, 정치, 경제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미래지향적 접근, 남북한 협력강화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미중 간의 기본협

서 협상전략의 모색, 호혜적인 한미 동맹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화, 한반도 평화관리와 통일외교 추진, 다자적 지역협력체제 구축 등이 과제이다.

25) 차재훈.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2 34(1), 147-182쪽.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결합하는 한중일 다자 안보체제의 틀을 갖추어 나가면 북한까지도 포용하는 평화질서의 구축이 가능하다: 고상두. 통일독일의 다자안보 경험과 동북아 평화에의 함의. 『오토피아』, 2010 25(3), 219-241쪽.

26)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국제관계연구』, 2010 15(1), 5-43쪽.

27) 6자회담을 북한 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다자 포럼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며(김민서.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 논총』, 2011 56(2), 11-46쪽), 이러한 검토는 북한인권법까지도 다루면서 포괄적 논의를 위한 기구인 한반도안보협력회의의 창설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민서.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제법학회논총』, 2005 50(3), 47-75쪽. 동북아의 다자주의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며, 북한은 약속 불이행이라는 불리한 이미지 때문에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주의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Frank Umbach.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 Asia. 『국제관계연구』, 2004 9(1), 179-229쪽.

28) 라미경.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평화연구』, 2007 15(1), 97-132쪽

29) 정창현. 남북공조 없이 동북아 주도권 확보 어렵다 - 남북정상회담·평화협정 체결, 현안으로 등장할 것. 『민족21』, 2011, 76-85쪽, 강정구. 정전협정 회담안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민족21』, 2012, 42-47쪽, 오인동. 60년 동안 평화협정 거부해온 미국 "남과 북의 힘으로 평화협정 체결하자!". 『민족21』, 2013, 58-74쪽.

30) 주재우.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 담론. 『오토피아』, 2011, 26(3), 63-93쪽.

정 체결, 양자간 협정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³¹⁾. 평화조약(협정) 체결의 일반적 절차에서도 당사자격, 조약내용, 승인, 비준, 효력발생 등에서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³²⁾ 평화협정 체결과 발효를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4강간의 대화, 협력, 합의 등 통일을 위한 어느 대안 못지않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군축회담, 영세중립국의 선언³³⁾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다. 연방제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국가 연합성 연방제, 민주적 연방제 등 외국의 사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연방제의 발상이 동원되어도³⁴⁾, 지금과 같은 군사주의 상태에서는 평화주의로 나아가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의 가시화 작업은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남북한과 주변 4강이 공유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 EU통합에 필요했던 모든 과정들을 참고하여,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나아가야 한다³⁵⁾.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평화협정의 체결, 연방제 통일의 실현 모두에 대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³⁶⁾.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과 주변 4강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북핵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³⁷⁾,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공조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31)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통일문제연구』, 2010, 22(1), 123-152쪽

32) 이용중. 감정적 특수관계의 성격과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조건. 『국제법학회논총』, 2003, 48(1), 247-269쪽.

33)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문화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남북문화예술연구』, 2010, 185-209쪽.

34)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권과 내치권은 지역정부에, 외교권은 단일정부에 두는 국가 연합성 연방제는 김용욱. 한반도의 연방제통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8 18, 1-22쪽, 민주서 rdu방제는 이국운.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법학연구』, 2012 53(2), 1-26쪽을 참고. 북한의 연방주의는 주체사상에 의해 왜곡된 연방주의라는 평가도 있다: Eung-Kyuk Park. Ideas of Federalism for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Peace. 『한·독사회과학논총』, 2006 16(1), 363-384쪽.

35) 채형복.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고』, 2008 28, 535-558쪽.

36)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중대, 주민자치 등을 통하여 평화를 위한 조건은 쌓여갈 수 있다: 강 량. 북유럽 신뢰구축조치 모델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09 2(2), 119-145쪽. 북유럽 신뢰구축 모델은 동아시아의 군사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논리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수호이며, 북한은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특히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신념으로 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은 북한에 대한 압박, 억제 논리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포용 논리의 병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³⁸⁾. 압박, 억제 대신에 선제 타격을 위주로 하는 군사주의와 대화, 포용을 넘는 경제지원이라는 평화주의 모두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많이 갖지 못한다. 한국 뿐 아니라 주변 4강 모두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 자체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 핵은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자체를 위해 그리고 민족주의와 평화주의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협상은 대단히 포괄적인 협상이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협상이기도 하다³⁹⁾. 이러한 상황 타개의 주도자는 물론 북한이다. 남한만이 당사자도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주도하면⁴⁰⁾ 핵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에 대한 모든 대안⁴¹⁾은 이론과 현실의 순환론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37) 주평. 북핵위기와 한중관계. 『EAI 프로젝트 리포트』, 2010, 3-13쪽.

38) 지속적인 압박을 통한 변화 기대. 강온전략에 의한 지원과 협상을 병행.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 태세 유지: 박휘락. 남북관계의 체로섭적 본질 회귀와 한국의 정책방향 분석. 『국제관계연구』, 2009 14(1), 85-112쪽,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김강녕. 북한의 핵개발전략과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2010 10(3), 45-102쪽, 국제적인 압력과 적절한 제재를 동반하면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 및 포용을 지속해야: Lee Seung-keun.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Resolution : Problems and Guidelines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사회과학논총』, 2010 29(1), 255-270쪽.

39) 남주홍. 북핵문제의 협상학 : 이론과 실제. 『전략연구』, 2010, 101-122쪽, 신성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전략연구』, 2010 17(1), 133-163쪽 등을 참고.

40) 김근식.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연구』, 2010 18(2), 139-166쪽: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가져 온다. 이럴 때, 북한에서는 반미주의와 선군주의가, 남한에서는 반북주의와 남남갈등이 약화되어, 한반도에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가 올 것이다.

41) '중간국가론'도 마찬가지이다. 서보혁, 박순성.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 『동향과 전망』, 2007, 153-189쪽: 한국이 통일을 향한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냉전적 외교-안보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탈동맹 선린 외교, 다자협력 추진, 인간안보에 기초한 국제협력 등에 기반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남북한 군비통제, 남북연합단계의 준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추진, 유엔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대안의 한계와 교회의 가르침

2013년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주의-민족주의가 분출되어 보편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조류들을 배경으로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군사주의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과학적 분성에 바탕을 두고 제시되는 대안은 평화의 직접적인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냉전적 이념 대결에 의한 정치체제의 폭력이 묵인되고, 국가주의-민족주의에 의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영토분쟁 등의 해결책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사주의를 넘어서려는 대안들 역시 최대한의 이성적, 논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평화주의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현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실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이론은 비합리적인 이론이 된다. 또한 현실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이념, 국가, 민족, 권력의 이름으로 모든 비합리는 합리화되고 정당화된다. 사회과학적 대안의 한계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평화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교리는 현실의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다. 1891년 반포된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인 『새로운 사태』의 1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2011년 사회교리 주간을 선포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1. 평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지상의 평화』는 지상의 평화가 하느님의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제1항). 하느님의 질서는 인간의 마음 안

에 새겨져 있으며, 이 질서가 양심을 일깨우며, 인간은 양심을 따라야 한다(제5항). 또한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주셨는데, 인간은 어디서나 이 법을 찾아야 한다(제6항). 이 법은 개인, 이웃, 국가 구성원, 국가, 국가들, 세계 공동체 들 사이의 상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설립은 보편적 공동선의 요구에서 나온다(제7항). 이상이 『지상의 평화』서론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는 평화의 건설을 거대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개인, 시민, 국가, 세계 공동체 간의 바른 관계 건설을 참된 평화의 실현으로 규정짓는다(제163항),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고, 우리들이 온갖 열성을 다한 기도로써 그리스도께 청하는 평화(제170항)로 규정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인간(개인)의 권리와 의무, 인간(개인)과 정치공동체(국가) 사이의 관계: 공동선-공권력, 정치공동체들 사이의 관계, 인간-정치공동체-세계공동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 공동선-보조성의 원리가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가톨릭인들의 역할이 언급된다.

『지상의 평화』의 구조는 거대하다. 개인, 사회, 국가, 국제간에 하느님의 질서가 존중되고, 하느님의 법이 지켜질 때, 지상에는 평화가 이룩된다. 그러므로 『지상의 평화』에 따른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는 각 국의 개인, 시민사회,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지역차원의 정치공동체들 모두가 주체가 되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각 주체들 차원의 공동선이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에 따라 발현될 때, 평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 『지상의 평화』의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교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42) 나정원, 가톨릭교회의 좋은 정부론,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2012, 300쪽

발표3 「지상의 평화」 반포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 공동체 수준 | 교회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 | | | |
|----------------|-----------------|--------------------------------------|--|---------------------|---|
| | 주체 영역 | 생명(생활) | 정의 공동선 | 연관개념 | 배격가치/실천가치 |
| 가정공동체 | 개인 가족 가정 | 하느님의 선물 인간의 존엄성 사유재산-본능 | 개인의 권리와 의무, 상호협조, 책임, 윤리, 양심 | 인격, 인권 자연권, 자연법, | 세속주의, 무신론, 허무주의, 자살/ 도덕적 생활, 성가 정, 생명존중 |
| 사회공동체 | 학교 직장 단체 | 재화의 보편성 삶의 질 고용 시민권 생명문화 | 경제정의 사회정의 사회공동선 | 노동(권) 민주주의 | 증오, 불화, 빈부 격차/ 생명윤리, 사랑, 자 선, 관용, 교육, 봉사, 나눔, |
| 정치공동체 민족공동체 | 국가 민족 | 하느님의 권위 공권력 | 국가정의 민족정의 국가공동선 민족공동선 | 민주주의, 평화 한반도 통일 | 사회주의, 국가주 의, 민족주의, 공 산주의/ 정치참여, 비폭력, 반부패, 법치 |
| 국제공동체 | 세계 국제사회 | 발전, 평화 협력, 대화 | 국제정의 국제적공동선 보편적공동선 | 평화체제 국제법 유엔헌장 | 저발전, 착취, 전 쟁/평화, 군비축 소, 무장해제, 원 조, 부채탕감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여러 공동체 차원의 공동선이 바로 '평화'이며, 따라서 지상의 평화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평화가 모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결국 어떤 차원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도 모두 평화에 관한 논의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교리 문헌은 평화에 관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증진과 국제 공동체의 촉진을 촉구하는 『사목헌장』도 마찬가지이다. 『사목헌장』도 개인, 가정에서의 인간 존엄성, 경제-사회생활, 정치공동체 생활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건설을 주장한

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제78항). 전쟁의 야만성을 방지하고, 전면 전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군비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상호 협조와 원조에서 신자들의 역할과 교회의 의무가 강조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그리스인의 삶에서도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이어 인류공동체에 관한 교리에 인간, 사회, 공권력(권위), 공동선, 책임과 참여에 관한 가르침이 있으며, 인격, 평등, 연대를 통한 사회정의를 규정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십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인 ‘살인해서는 안 된다’와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2302항 - 2330항).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 ‘정의의 결과이며 사랑의 결실’이다(2304항). 한편 사회교리의 문헌은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교리 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곳곳에 평화와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에서 평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들의 저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평화 뿐 아니라 다양한 모든 주제는 사회교리 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성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평화를 분석하는 기본원리는 『간추린 사회교리』에 집약되어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는 교황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사회교리 문헌을 간추려서 집약해놓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이다. 평화에 관한 내용도 제11장 ‘평화의 증진’에 자세하게 지적되어 있다. 또한 『간추린 사회교리』에는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로,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의 원리, 참여, 연대성의 원리, 사회생활의 근본가치(진리, 자유, 정의) 등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제4장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

평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사회교리의 기본원리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가정, 사회, 국가, 국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각각의 정의와 공동선이 평화이다. 다양한 공동체들의 공동선의 총합으로 거대한 평화는 이루어진다. 공동선인 평화를 위해서 규모가 큰 상위공동체는 규모가 작은 하위 공동체에 대해 보조성의 원리를, 하위 공동체는 상위 공동체에 대해서 연대성의 원리와 참여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각 공동체의 주체들은 재화를 보편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기준이 되는 가치들은 진리, 자유, 정의 등이다.

4-2. 평화를 향한 길, 통일을 향한 길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대안들은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적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냉전적 갈등은 국가-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안을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대안인 다자안보협력체제, 평화협정 체결, 통일방안,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사회과학적 대안의 한계를 넘어 교회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이끌고 있는 지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교회는 양심과 이성에 바탕을 둔 대안들을 지지하고 보충해주며, 실천에 힘을 보태준다.

4-2-1.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지향

통일을 위해 한국의 북한에 대한 민주화 요구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이론적 차원의 대안 제시 역시 대단히 정치적이다. 또한 냉전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모든 노력은 그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통일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

회주의의 공존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는 작업,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이 통일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되는 셈이다.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이 앞에서 제시한 이념의 냉전적 갈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대안이다.

먼저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사회교리에 나타나는 교회의 입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문제점에 대한 비판, 개선 노력의 촉구,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공산주의는 물론 단죄의 대상이다¹⁾.

한국 교회는 사회교리에 바탕을 두고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²⁾. 민주화의 기본은 비민주적인 정권,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비상사태 선언의 철회와 국가 안전 보위법의 철회, 정보 정치의 지양의 촉구였다. 또한 인간화는 노동자, 농민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존중, 권리에 대한 보장의 촉구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가 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화를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화가 되지 않는 곳에 참된 민주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강론 : ‘개헌보다 인권문제가 더 시급하다’, 1986년 7월 21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87년 이후에도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소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도 ‘민주화와 인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도 북한에 대해 ‘민주화와 인간화’를 요구해야 한

1) 나 정원, ‘민주주의와 가톨릭교회’, 사목, 2002년 12월호, ‘맑시즘 국가론의 실천적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0집 1호, 1996 등을 참고

2) 이하의 내용은 나정원, 한국 가톨릭 지도자들의 국가관 연구-김수환 추기경과 사회교리: 1969년 이후,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하)』, 2006, 295-314쪽의 발췌, 요약임.

다. 북한의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침묵은 냉전적 대결의 강요에 대한 굴종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입장이 사회교리에는 풍부하게 있지만, 통일에 대한 입장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화나 인간화의 경우처럼 사회교리의 직접적인 인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교회내의 일치를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김수환 추기경의 입장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화통일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통일입니다. 즉,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나라, 한마디로 참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는 통일을 말합니다”(참된 인간화를 추구하는 길, 통일, 1994).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북한의 교회가 침묵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을 옹호한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의 창조주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과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과 ‘잘못하는 사람’을 분별합니다. 비록 교회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포 형제들에게 대해 증오와 폭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같은 하느님의 한 근원이며 향해야 할 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같은 형제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김수환,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1975).

“남북 관계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비리를 이론적인 면과 현실에 비추어 정정 당당하게 비판하곤 그들은 또한 남한 자본주의 체제를 정정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의든, 사상이든, 어떤 정치 체제든, 모두 상대적이에요, 결함이 있으며 언제나 비판과 반성으로 시정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깔려서는 대화도, 평화도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반공은 필요하지만 반공이 곧 미움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우리를 비판하되,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민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정의 없이 평화 없다’, 1978).

“이념과 체제를 앞세워 동족을 미워하고 분단을 정당화해 온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 민족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은 가능할 것입니다”(체제를 넘어, 이념을 건너. 평화통일 선언문, 1994).

4-2-2.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보편주의의 실현

한반도의 남북은 하나의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념과 체제의 차이 때문에 민족주의의 내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공동체의 추구보다는 경제, 문화, 환경 등에 제한된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냉전적 대결을 완화하는 방안이 사회과학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실천에서는 여전히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장애로 등장했고,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질적인 국가주의-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평화를 이룩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로 하자. 평화에 대한 사회교리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등이다. 이들 원리들과 다른 문헌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연결시켜 남북한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형제애에 기초한 연대를 해야 하며, 남한은 북한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고, 도와주어서, 공동선을 실현하되,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은 도움을 받되 자신의 고유 가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공동선, 정의, 평화의 실현방법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과학적 대안으로 제시된 제한된 범위의 교류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교회 입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치 공동체 사이의 관계들은 정의에 따라 통제 되어야 한다. 이는 상호간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각개의 의무들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상의 평화』91).

‘정치 공동체들은 그 존립, 그 고유한 발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여기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겠다. “정의를 저버리면, 강도의 큰 집단이 되는 것 이외에 어떤 왕국이 될 것인가?”(『지상의 평화』 92).

‘경제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바꾸려 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어머니요 스승』 171). “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은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저개발 국가들의 종족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들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지배욕 없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세계 공동체 형성이 분명히 크게 진전될 것이며, 그 공동체의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면서 모든 민족들의 번영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지상의 평화』125).

4-2-3. 군사주의를 억제하는 평화주의의 실현

한반도에서 군사주의를 억제하고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사회과학적 대안은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 남북 평화협정 체결, 핵 문제의 해결 등이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교리 문헌에서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개념 정의는 『지상의 평화』, 『사목헌장』, 『민족들의 발전』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동체 수준에서 실현되는 공동선이 평화임을 감안하면 사회교리의 모든 문헌이 평화에 관한 문헌이다. 2003년 개정판『가톨릭 교회교리서』, 2004년 발행된 『간추린 사회교리』는 평화에 관해 교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집대성, 요약해 놓은 평화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헌에서 군사주의를 억제하고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세계적 공권력의 설정과 전쟁금지,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포함하는 군비축소 등을 위한 협력, 무기의 생산과 거래에 대한 규제, 평화를 해치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 윤리적, 한정적 제재, 테러리즘에 대한 단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평화의 증진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들 모두 평화라는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 동원되며,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자안보체제, 평화협정,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 창조되어 그분의 자녀가 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세상에는 결코 정의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어머니요 스승』, 215항)

“평화는 무기의 위협으로 여러 국가에 강요하느니보다 여러 국가들 상호 신뢰에서 발생해야 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군비 경쟁에 종지부를 찍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사목헌장』, 82항)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쟁 대신에 더욱 인간다운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세계정의』, 59항)

“교회는 개인과 민족, 국가와 국민들에게 평화를 재확립하고 공고히 하는 일에 대한 교회의 관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법의 중요한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간추린 사회교리』, 516항)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가르침의 실천

2013년 한반도의 상황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세계에서 평화와 거리가 제일 먼 지역이 한반도이다. 전 세계 4강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 같은 민족끼리 가장 증오심을 드러내는 지역이 한반도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냉전적으로 대결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하게 분출하고, 군사주의가 평화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이다.

한반도 평화도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국제공동체를 통한 공동선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519항). 교회는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주체들은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선의 형성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국제공동체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사회생활의 근본가치(진리, 자유, 정의)를 기준으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평화라는 공공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개인은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 민족공동체, 국제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며,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책임 있고, 양심에 따른 도덕적 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기도, 교회에서 제시하는 평화를 위한 여러 종류의 기도도 중요한 실천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가 평화를 위한 삶이다.

가정공동체는 가족 구성원(개인),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 민족공동체, 국제공동체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성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평화의 토대를 쌓는 일이다. 사회공동체와 국제공동체, 국제공동체에 대하여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협조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가정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원리에 따라 재화가 보편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랑, 자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공동체는 가족구성원(시민), 가정공동체, 정치공동체, 민족공동체, 국제공동체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먼저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성가정을 위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은 재화의 보편성을 위한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다. 관용, 봉사, 교육을 통하여 인간존중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평화의 기본 조건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학교, 직장, 단체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과 봉사의 원칙들을 세우는 일은 사회적 공동선, 정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또한 정치공동체, 민족공동체, 국제공동체가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평화라는 공동선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보조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공동체(국가)는 가족구성원(국민),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 국제공동체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족공동체와 국제공동체가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평화라는 공동선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보조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의 수호와 실현에서 정치공동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공동체들은 정치공동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보조해야 한다. 가족구성원과 사회공동체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권력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감시해야 한다. 국제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연법적 원칙이 지켜지고 폭력과 부패, 비효율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민족공동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공동체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에서 ‘인간화와 민주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협력, 대화, 지원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역할을 한국의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는 국제공동체와 협력하여 보완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위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원리에 맞추어 선의의 사랑과 자선, 기부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와 관련된 이념과 체제의 차이보다는 ‘인간화’와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국제공동체는 정치공동체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념과 체제의 장애도 국제공동체의 역할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 정치공동체는 국내의 가족구성원,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제공동체에 대해 연대와 보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민족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저발전에 대한 지원, 전쟁의 회피, 군비 축소, 단계적인 무장해제, 필요한 지원과 원조도 연대와 보조, 재화의 보편성과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교리의 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냉전적으로 대결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하게 분출하고, 군사주의가 평화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각 국의 여러 차원의 모든 공동체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여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달성되기를 바란다.

“지상의 평화는 하느님의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지상의 평화』제1항)

“참된 평화는 우리들이 온갖 열성을 다한 기도로써 그리스도께 청하는 평화이다”
(『지상의 평화』제170항)

부록1

도표의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GDP: 24,720,000명 × 783달러 = 19,255,760,000달러//북한 인구 24,720,000명(미 CIA 파악) ‘13년 7월 13일 기준(미국 자유 아시아방송: RFA), 1인당 GDP : 783달러(현대경제연구원). 2. 북한 국방비: a.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 2010년에 의하면 81억 달러, b. 북한의 공식적 발표자료 근거로 한 2006년 아시아군사력비교(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60억 달러이며, 2005년 이후 자료는 없음. 북한의 공식적 입장보다는 실질적 국방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3. 북한군 병력은 육군 : 102만 명, 해군 : 6만 명, 공군 : 11만 명, 총 병력 : 119만 명으로서 예비전력을 제외한 평시 병력임. 4. 1인당 국방비: 783달러 × 0.31 = 242달러. 한편 최근 북한의 국방비보다 우리 국방비가 월등이 많다는 비판적 시각 때문에 공식적인 북한의 국방비 판단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국방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을 의식하는 조처라고 판단 된다. 또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는 터무니없이 작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인건비나 유지비 등 관리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준으로 북한의 국방비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비에 대한 판단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다음의 두 가지 표는 이러한 추정치를 보충해준다.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최근 논문으로는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2012 15(3), 100-145쪽이 있다.

북한의 경상 GNI와 군사비 지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 경상 GNI | 군사비 지출 |
|------|--------|--------|
| 1960 | 15 | 31 |
| 1965 | 23 | 61 |
| 1970 | 40 | 99 |
| 1975 | 94 | 202 |
| 1980 | 135 | 339 |
| 1985 | 151 | 348 |
| 1990 | 231 | 496 |

* 자료: 통일부, 한국은행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북한의 재정규모와 북한발표 군사비 산출결과

(단위 : 결산기준, %, 억 달러)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재정규모 | 93.2 | 97.6 | 99.6 | 111.9 | 120.6 | 125.9 | 130.2 | 136.8 | 140.2 |
| 군사비 비중 | 14.3 | 14.4 | - | - | 15.6 | 15.9 | 16.0 | 15.7 | 15.8 |
| 발표 군사비 | 13.3 | 14.1 | - | - | 18.8 | 20.0 | 20.8 | 21.4 | 22.2 |
| 실질 군사비 | 47.8 | 50.7 | 51.7 | 58.1 | 62.6 | 66.6 | 69.3 | 71.4 | 73.6 |

* 자료 새롭게 산출된 재정규모와 북한 발표 군사비 비중에 기초하여 추정.

* 국방정보본부, 『북한전략정보자료집(2007)』, p 389 참조.

* 2000년도 실질군사비는 재정증가율을 적용, 나머지는 발표군사비 증가율을 적용.

부록2

남북 군사력 비교

2012년 1월 기준

| 구분 | | 한국 | 북한 | | |
|------------|----|-----------------------------|------------------|-------------|--------------|
| 병력 (평시) | 육군 | 50.6만여 명 | 102만여 명 | | |
| | 해군 | 6.8만여 명 (해병대 2.8만여 명 포함) | 6만여 명 | | |
| | 공군 | 6.5만여 명 | 11만여 명 | | |
| | 계 | 63.9만여 명 | 119만여 명 | | |
| 주요전력 | 육군 | 부대 | 군단(급) | 12(특전사 포함) | 15 |
| | | | 사단 | 46(해병대 포함) | 88 |
| | | | 기동여단 | 14(해병대 포함) | 72(교도여단 미포함) |
| | 장비 | 전차 | 2,400여 대(해병대 포함) | 4,200여 대 | |
| | | 장갑차 | 2,700여 대(해병대 포함) | 2,200여 대 | |
| | | 야포 | 5,300여 문(해병대 포함) | 8,600여 문 | |
| | | 다련장/방사포 | 200여 문 | 4,800여 문 | |
| | | 지대지 유도무기 | 30여 기(발사대) | 100여 기(발사대) | |
| | 해군 | 수상함정 | 전투함정 | 120여 척 | 420여 척 |
| | | | 상륙함정 | 10여 척 | 260여 척 |
| | | | 기뢰전함정 | 10여 척 | 30여 척 |
| | | | 지원함정 | 20여 척 | 30여 척 |
| | 공 | 전투임무기 | 460여 대 | 820여 대 | |

발표3 ‘「지상의 평화」 반포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 | | | | |
|------|---|---|-------------------------------------|--------|
| | 군 | 감시통제기 | 5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 30여 대 |
| | | 공중기동기 | 40여 대 | 330여 대 |
| | | 훈련기 | 190여 대 | 170여 대 |
| | | 헬기(육·해·공군) | 680여 대 | 300여 대 |
| 예비병력 | | 32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간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군위대 포함) | |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함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함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부록3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10월 1일 조인, 1954년 11월 18일 발효.

<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1966년에 체결되고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로 약칭됨) 등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틀 유지. 주한미군은 현재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

“미일안전보장조약(美日安全保障條約)”

1951년 9월 8일 체결(1952.4.28. 발효)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구조약)과 1960년 6월 20일 개정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조약)이 있다.

1951년 구조약은 미군의 주둔을 규정하고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규정.

1960년 신조약에서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소요에 대한 미군의 개입가능성과 일본이 제3국에 기지를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

1996년 7월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은 일본의 방위비 부담 증대 등 일본의 역할 강화로 보완.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에 관한 정책협의를 외교·방위장관회의(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안보고위사무급 협의(SSC, Security Sub Committee), 방위협력 소위원회(SDC,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등 외교방위 관계자 간에 다양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음. 2010년 12월 24일 현재 주일미군의 규모는 약 3만 7659명이며, 육군이 2,729명, 해군이 5,940명, 해병대가 1만 6640명, 공군이 1만 2350명이다. 한국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북한의 오판에 의해 한반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목적과, 한·미동맹

의 외적 위협에 대항하고 중국과 구소련 모두에게서 안보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의 이해에 따라, 북한은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 구소련 모두와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부위협에 대처함. 1961년. 6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그해 7월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함.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1961년 7월 11일(1961. 9.10 효력발생)

<조약 전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

이 유지된다.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961년 7월 6일 체결.

<조약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맹간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양국인들의 사활 적 이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소련 내각 수상 니키타 흐루쇼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양 전권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 · 세미나

며 계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계약 각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계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계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계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 수상 엔 에스 흐루쑈브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의 비교

| 구 분 | 조·소 조약(1961. 7. 6) | 조·중 조약(1961. 7. 11) |
|------|---|---|
| 유효기간 | 10년 | 무기한 |
| 주요내용 | ·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했을 경우 타방은 즉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 · 쌍방은 상대방이 대하는 행동 및 동맹에 불가담 | · 쌍방 중 일방에 대한 제3의 국가로부터 침략 시 이를 방지하지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 ·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음. |
| 조약갱신 | · 일방이 기한만료 1년 전에 폐기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 연장 | ·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 지속 |
| 비 고 | · 1996년 9월 폐기 · 2000년 2월 신조약 체결 | · 현재까지 조약 유지 |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 : 중국(마오쩌둥)과 소련(스탈린) 간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으로, 1950년 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고 4월 11일 발효되었다. 60년대 이후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래로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 조약은 유명무실화 되고 마침내 79년 4월 중국은 80년 4월의 기한 만료 후에 본 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결정, 소련에 통고하였다.

부록4

전세계 핵무기 현황, 1945-2013

| 연도 |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중국 | 이스라엘 | 인도 | 파키스탄 | 북한 | 총량* |
|------|-----|------|----|-----|----|------|----|------|----|-----|
| 1945 | 2 | | | | | | | | | 2 |
| 1946 | 9 | | | | | | | | | 9 |
| 1947 | 13 | | | | | | | | | 13 |
| 1948 | 50 | | | | | | | | | 50 |
| 1949 | 170 | 1 | | | | | | | | 171 |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세미나

| | | | | | | | | | |
|------|--------|--------|-----|-----|-----|----|---|--|--------|
| 1950 | 299 | 5 | | | | | | | 304 |
| 1951 | 438 | 25 | | | | | | | 463 |
| 1952 | 841 | 50 | | | | | | | 891 |
| 1953 | 1,169 | 120 | 1 | | | | | | 1,290 |
| 1954 | 1,703 | 150 | 5 | | | | | | 1,858 |
| 1955 | 2,422 | 200 | 10 | | | | | | 2,632 |
| 1956 | 3,692 | 426 | 50 | | | | | | 4,168 |
| 1957 | 5,543 | 660 | 58 | | | | | | 6,261 |
| 1958 | 7,345 | 863 | 60 | | | | | | 8,268 |
| 1959 | 12,298 | 1,048 | 78 | | | | | | 13,424 |
| 1960 | 18,638 | 1,627 | 105 | | | | | | 20,370 |
| 1961 | 22,229 | 2,492 | 155 | | | | | | 24,876 |
| 1962 | 25,540 | 3,346 | 211 | | | | | | 29,097 |
| 1963 | 28,133 | 4,259 | 256 | | | | | | 32,648 |
| 1964 | 29,463 | 5,242 | 271 | 4 | 1 | | | | 34,981 |
| 1965 | 31,139 | 6,144 | 271 | 32 | 5 | | | | 37,591 |
| 1966 | 31,175 | 7,091 | 281 | 36 | 20 | | | | 38,603 |
| 1967 | 31,255 | 8,400 | 355 | 36 | 25 | 2 | | | 40,073 |
| 1968 | 29,561 | 9,490 | 317 | 36 | 35 | 4 | | | 39,443 |
| 1969 | 27,552 | 10,671 | 306 | 36 | 50 | 6 | | | 38,621 |
| 1970 | 26,008 | 11,736 | 375 | 36 | 75 | 8 | | | 38,238 |
| 1971 | 25,830 | 13,279 | 412 | 45 | 100 | 11 | | | 39,677 |
| 1972 | 26,516 | 14,600 | 423 | 70 | 130 | 13 | | | 41,752 |
| 1973 | 27,835 | 15,878 | 500 | 116 | 150 | 15 | | | 44,494 |
| 1974 | 28,537 | 17,286 | 500 | 145 | 170 | 17 | a | | 46,655 |
| 1975 | 27,519 | 19,235 | 500 | 188 | 180 | 20 | | | 47,642 |
| 1976 | 25,914 | 22,165 | 500 | 212 | 180 | 22 | | | 48,993 |
| 1977 | 25,542 | 24,281 | 500 | 228 | 180 | 24 | | | 50,755 |
| 1978 | 24,418 | 26,169 | 500 | 235 | 190 | 26 | | | 51,538 |
| 1979 | 24,138 | 28,258 | 500 | 235 | 195 | 29 | | | 53,355 |
| 1980 | 24,104 | 30,665 | 500 | 250 | 205 | 31 | | | 55,755 |
| 1981 | 23,208 | 32,146 | 385 | 274 | 210 | 33 | | | 56,371 |
| 1982 | 22,886 | 33,486 | 380 | 274 | 216 | 35 | | | 57,282 |
| 1983 | 23,305 | 35,130 | 350 | 279 | 218 | 38 | | | 59,350 |
| 1984 | 23,459 | 36,825 | 350 | 280 | 220 | 40 | | | 61,174 |
| 1985 | 23,368 | 38,582 | 350 | 360 | 222 | 42 | | | 62,924 |
| 1986 | 23,317 | 40,159 | 350 | 355 | 224 | 44 | | | 64,449 |
| 1987 | 23,575 | 38,107 | 350 | 420 | 226 | 47 | | | 62,725 |
| 1988 | 23,205 | 36,538 | 350 | 410 | 228 | 49 | | | 60,780 |
| 1989 | 22,217 | 35,078 | 350 | 410 | 230 | 51 | | | 58,336 |

발표3 ‘ 「지상의 평화」 반포50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 | | | | | | | | | | |
|------|--------|--------|-----|-----|-----|----|-----|-----|---|---------|
| 1990 | 21,392 | 32,980 | 350 | 505 | 232 | 53 | | | | 55,512 |
| 1991 | 19,008 | 29,154 | 350 | 540 | 234 | 56 | | | | 49,342 |
| 1992 | 13,708 | 26,734 | 250 | 540 | 234 | 58 | | | | 41,524 |
| 1993 | 11,511 | 24,403 | 250 | 525 | 234 | 60 | | | | 36,983 |
| 1994 | 10,979 | 21,339 | 250 | 510 | 234 | 62 | | | | 33,374 |
| 1995 | 10,904 | 18,179 | 234 | 500 | 234 | 63 | | | | 30,114 |
| 1996 | 11,011 | 15,942 | 203 | 450 | 234 | 64 | | | | 27,904 |
| 1997 | 10,903 | 15,442 | 203 | 450 | 232 | 66 | | | | 27,296 |
| 1998 | 10,732 | 14,368 | 240 | 450 | 232 | 68 | 3 | 2 | | 26,095 |
| 1999 | 10,685 | 13,188 | 240 | 450 | 232 | 70 | 8 | 8 | | 24,881 |
| 2000 | 10,577 | 12,188 | 280 | 470 | 232 | 72 | 13 | 14 | | 23,846 |
| 2001 | 10,526 | 11,152 | 280 | 350 | 235 | 74 | 18 | 20 | | 22,655 |
| 2002 | 10,457 | 10,114 | 280 | 350 | 235 | 76 | 23 | 26 | | 21,561 |
| 2003 | 10,027 | 9,076 | 280 | 350 | 235 | 78 | 28 | 32 | | 20,106 |
| 2004 | 8,570 | 8,038 | 280 | 350 | 235 | 80 | 33 | 38 | | 17,624 |
| 2005 | 8,360 | 7,000 | 280 | 350 | 235 | 80 | 38 | 44 | | 16,387 |
| 2006 | 7,853 | 6,643 | 225 | 350 | 235 | 80 | 43 | 50 | b | 15,479 |
| 2007 | 5,709 | 6,286 | 225 | 350 | 235 | 80 | 50 | 60 | | 12,995 |
| 2008 | 5,273 | 5,929 | 225 | 300 | 235 | 80 | 60 | 70 | | 12,172 |
| 2009 | 5,113 | 5,527 | 225 | 300 | 240 | 80 | 70 | 80 | b | 11,635 |
| 2010 | 4,950 | 5,215 | 225 | 300 | 240 | 80 | 80 | 90 | | 11,180 |
| 2011 | 4,763 | 4,858 | 225 | 300 | 240 | 80 | 90 | 100 | | 10,656 |
| 2012 | 4,680 | 4,500 | 225 | 300 | 240 | 80 | 100 | 110 | | 10,235 |
| 2013 | 4,650* | 4,480* | 225 | 300 | 250 | 80 | 110 | 120 | b | 10,215* |

*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표시된 핵탄두 이외에도 수천 개의 핵탄두가 창고에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의 핵탄두 총량은 17,000기 이상이다.

a.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을 했다.

b. 북한은 2006, 2009, 그리고 2013년에 핵실험을 했으나, 핵탄두 비축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전: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3 69(5) 75-81

■ 발표4

평화를 위한 가톨릭 신앙인의 실천

서울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

우리는 일상의 삶속에서 수 없이 ‘평화’를 외친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다.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연구해 왔으나 평화라는 말이 던지는 무게감이나 함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평화는 주로 전쟁의 대립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의 평화는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무력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민족이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된다.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속에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염원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평화는 종종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이런 개념은 좁은 의미이자 지극히 단순하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 테러, 범죄, 빈곤, 실업, 차별, 억압, 기아, 환경파괴, 교육의 박탈 등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협이나 폭력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평화란 ‘국가 단위에서 언급되는 개념 뿐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억압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실현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톨릭 신앙인에게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소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오 제5장 9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사목헌장 제78항)라고 언급한다.

또한 “인간 생명의 존중과 성장에는 평화가 필요한 것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이다. 평화는 정의의 결실이며 사랑의 결과”(가톨릭교회교리서 2304-2305항 참조)라며 일상적인 삶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해 본다.

1. 평화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

① 내가 먼저 ‘평화’가 되기

자신과 가정 안에 있는 갈등과 폭력 성향에 대하여 성찰하고 비폭력 대화, 생명 존중, 그리고 평화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인터넷 상에서 평화 실천하기

댓글 달 때 고운 말 쓰기, 악성 댓글 달지 않기, 신상 털지 않기

③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하지 않기

④ 타인의 사생활 보호하기

2. 평화를 위한 기도의 생활화

①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② 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

③ 강우일 주교님의 평화를 위한 기도

3. 평화 운동

① 평화 도보행진 : 비무장지대 (인제군 소재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성지순례

② ‘전쟁기념관’을 ‘평화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캠페인

- ③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캠페인
- ④ 일본의 헌법 제9조 지키기 운동에 동참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4. 평화교육을 통한 평화의식의 확산

- 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또는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평화센터 건립
- ② 다양한 내용의 평화교육 실시
특히 청소년에게 평화교육·사회교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③ 평화기행을 실시한다.
- ④ 문화매체를 통한 평화 감수성 키우기
평화의식을 키워주는 책이나 동영상을 보급한다.

※ 참고 자료

□ 평화를 주제로 한 책

1.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인가

<나가이 다카시 지음/조양욱 옮김/248쪽/1만 원/해누리>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 공군 B29 폭격기가 나가사키 상공에서 투하한 원자 폭탄으로 착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오른쪽 두부(頭部) 동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자전적 이야기다.

우리나라에 「영원한 것을」을 통해 그 생애가 잘 알려진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대학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로서 원폭 피해로 아내를 잃고 열 살짜리 아들과 네 살짜리 딸을 힘겹게 키우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이웃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 시한부 인생을 산 인물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 않는 날이면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과

산골을 찾아 무료 진료를 펼쳤다. 이것은 원폭으로 나가사키가 폐허가 되기 전부터 일상이 된 그의 삶이었다.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삶과 박애정신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나가사키를 찾아오는 인파들이 생겨났다. 불굴의 의지를 지닌 여인 헬렌 켈러, 교황이 위문 특사로 파견한 대주교, 심지어 일본 천황까지 달려와 그의 손을 부여잡고 격려했다. 그는 영원한 나가사키 명예시민의 칭호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방사선 전문의에게는 직업병인 백혈병에 걸려 3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도 원폭 투하 후 5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한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가 이 책에 그려져 있다.

2. 나가사키의 종

<나가이 다카시 지음>

일본 원폭 피폭의 참상을 담은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책.

3. 머튼의 평화론 (원제 : 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토마스 머튼 저 / 조효제 역. 2006년: 분도출판사>

가톨릭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예언적 유고집.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주제뿐 아니라, 폭력과 전쟁 등은 물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평화를 위한 행동을 제안한다.

4. 평화, 평화 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평화교육센터 편저. 내일을 여는 책, 1995년>

5. 19년간의 평화수업

<콜먼 맥카시 지음/ 이철우 번역 / 책으로여는세상>

소년원, 가난한 공립학교, 부유한 지역의 사립학교, 대학교, 로스쿨 등에서 펼쳐지는 '평화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 뜻 깊은 평화수업 이야기다. <위싱

턴포스트>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평화에 관해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으로, 서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푸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6.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최상용 편저. 1992년 : 한길사>

7. 평화 : 이론과 실천의 모색 (Ⅱ)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엮음. 서울:삼민사. 1992년>

8. 전쟁과 평화의 윤리

<더글러스 래키 저, 최유신 역. 철학과현실사, 2006년>

9. 21세기 평화학

<하영선 편저. 풀빛, 2002년>

10. 평화의 발명 : 전쟁과 국제 질서에 대한 성찰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 2002년 : 전통과 현대>

전쟁과 국제 질서에 대한 노장 역사학자의 성찰인 이 책은 전쟁을 인류사의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전쟁은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도덕적 확신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인간의 치열한 노력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권태로운 평화'가 자칫 파괴적 폭력의 방출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9·11 테러 이후 군사적 해결에 집착하는 미국에 대해 깊은 사려와 장기적 안목을 권고하고 있다.

1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요한 갈통 저 / 강종일,정대화 등 역. 들녘 출판사, 2000년>

12. 인권과 평화 함께 읽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저, 2007년>

13. 민통선 평화기행

<이시우 지음/ 창작과비평사>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의 기행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년간의 두 발로 민통선 곳곳을 누빈 땀의 기록이다. 통일운동단체와 민간단체의 분단통일기행을 여러 해 동안 안내한 길잡이로서의 자상함은 물론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눈빛이 담겨 있다. 철원,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파주, 화천, 양구, 연천, 고성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직접 찍은 사진 160여 컷과 철학이 묻어나는 글을 통해 생생한 분단현실을 보여준다.

14. 평화는 나의 여행

<임영신 저. 소나무, 2006년>

2003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고자 한 저자는 평화가 '평화로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자신이 평화가 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저자는 41번째 피스보트에 올라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에리트리아, 레바논을 여행하며 갈등과 분쟁 속에서 희망을 심는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필리핀 등을 넘나들며 얻은 평화에 대한 깨달음을 조용히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품도록 이끈다.

15.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교육 :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평화교육 교재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저. 2001년>

16. 「평화그림책」시리즈 / 사계절 출판사 기획

아이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

제1권 꽃할머니 / 권윤덕 지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책. 몇 십 년이 흐른 뒤에야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픈 과거를 세상에 꺼내 놓고 역사의 증인이 된 꽃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였다. 1940년 13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끔찍한 고통을 받고 일생을 다 잃어버렸던 꽃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쟁 중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과 인권 유린의 참상을 알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제2권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 이역배 지음.

아이들을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로 인도한다. 기다란 철조망이 가로막아 사람들은 오가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자유롭게 오가는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곳의 사계절의 빛대어 들려주고 있다. 통일이 되어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걷어내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되돌려야 함을 일깨워준다.

제3권 평화란 어떤 걸까 / 하마다 게이코 지음 | 박종진 옮김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를 들려주는 그림책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집과 마을을 파괴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맘껏 부를 수 있는 것,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등 아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행복을 이야기한다. 결국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행복임을 깨닫게 한다. 노랑을 주요색으로 하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은 아이들게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제4권 경극이 사라진 날:1937년 친화이하 강가에서 / 야오홍 지음, 전수정

옮김

중국 난징 출신 작가 야오홍이 어머니가 겪은 중일전쟁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아냈다. 일본군에 의한 난징대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0년대, 난징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유명한 경극 배우와 친화이하 강가의 외할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게 된 열 살 소녀가 경극에 마음을 사로잡혀버린 아름다웠던 저녁 시간 속으로 초대한다.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의 광폭함을 일깨우고 있다.

제5권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 다시마 세이조 저

전쟁에 희생된 한 병사의 영혼이 들려주는 피맺힌 외침을 들려주고 있다. 형상이 절제된 반추상의 소박하고 예스러운 그림이 광기로 가득찬 전쟁의 슬픔, 분노, 증오의 격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물

1. 「세계의 종교」

<7부작 비디오 (베네딕도 미디어 발행), 각 60분>

‘종교간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제작된 이 작품은 1999년 독일 3sat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걸작 다큐멘터리로서 △원주민 종교 △힌두교 △중국종교 △불교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를 7개 범주에 넣어 소개한다. 서로 대화하고 공존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종교의 기원과 발전과정, 핵심교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적인 가톨릭 신학자 한스 쾅(76세, 독일 튀빙겐대 명예교수) 박사가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감 넘치는 목소리로 해설한다는 점이다.

■ 기념미사

제3회 사회교리주간 기념 미사

12월 8일(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시작성가 : 89번 주 하느님 자비로이

- 1) 주 하느님 자비로이 천국문을 여시고 메시아를 보내소서 우리들의 구세주
- 2) 어두움이 깊은 밤에 새 생명이 그리워 비탄 속에 눈물로써 너를 고대하도다
- 3) 이새의 옛 가문에서 구세주를 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소서

후렴 : 임하소서 주여 오소서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1,1-10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를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젓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

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앗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겨
 레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
 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
 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
 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
 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5,4-9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
 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
 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12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

봉헌 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 1) 너그러이 받으소서 가난한 우리 선물을 이 몸과 마음 모두를 제물로 주께 드립니다.
- 2) 성자께서 바친 제물 우리도 함께 바치며 사랑의 완전한 제사 찬미와 흠송 드립니다
- 3) 사제의 한 말씀으로 밀떡과 술의 형상은 주님의 몸과 피 되어 우리의 양식 되시도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성체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 1)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2)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3)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

히 살게 하리

- 4)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파견성가 :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 1) 임하소서 임마누엘이여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구세주 기다리니
우리 가운데 어서 오소서
- 2) 임하소서 인류의 구세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오며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 3) 임하소서 다윗 후손이여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오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소서

후렴 :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부록>

■ 부록1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가 주최한 ‘지상의 평화’ 5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들에게 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연설

(2013년 10월 3일 클레멘스 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복자 요한23세 교황이 1963년 4월11일 반포한 역사적 회칙 ‘지상의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평의회는 교황 요한23세를 성인으로 선포한 직후에 이 모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 특히 특손 추기경에게 감사드립니다. 특손 추기경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대부분은 회칙 ‘지상의 평화’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반포되었으며, 그 시절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962년 말 인류는 핵전쟁 직전에 놓여 있었으며, 교황은 이 때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극적이며 심금을 울리는 평화를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는다면, 지구 곳곳에서, 순진무구한 어린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늘을 향해 ‘평화, 평화!’를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1962년 10월 25일 라디오 연설) 이 호소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지만 하늘에 간절히 청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 블록 사이의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이는 요한 바오로 2

세 재위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대화국면을 이끌었고, 자유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이 뿌린 평화의 씨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벽과 장애가 제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하고 '지상의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1. 그렇지만 평화건설에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의 평화'는 이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반은 인간, 사회, 그리고 권위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거룩한 기원 때문에 개인, 가정, 다양한 사회 그룹, 국가는 정의와 연대의 관계를 실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평화 건설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수반한 정의를 증진하고 실천하는 길과, 자신이 갖고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연대의 논리를 따라 종합적인 인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상의 평화'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곤 합니다. 저는 정의와 연대라는 말이 그저 사전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정의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행동하고 있는지를 묻곤 합니다. 요한23세 교황의 회칙은 보다 정당하고 통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이며, 집단적인 이익 추구의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참된 평화와 조화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인간, 사회, 그리고 권위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환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상의 평화'는 기본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항상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증진되어야 할 모든 인간의 존엄함인 인간의 귀함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되어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원리일 뿐 아니라, (교황 요한

23세가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은 물론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물, 주택, 의료,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시민 정치적 권리와 생존의 권리)이야말로 모든 국가의 행위, 국제사회의 행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그럴 때 그 행위들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체와 중간단체들이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회칙은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과 요소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3. ‘지상의 평화’는 토론이 필요한 복잡한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가르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실질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도그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하고, 듣고, 인내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도그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23세는 이런 덕목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1962년 평화를 호소한 것입니다.

‘지상의 평화’가 담은 기본적 원리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사태’, 예를 들어, 교육위기, 시민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 지구 자원 문제, 생물학연구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 군비경쟁과 국가 및 국제사회의 안전 수단들 따위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는 인간에 대한 존중, 진리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정부와 시민은 인간과 진리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상의 평화’는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의 평화’는 사람들 마음 안에 형성되어야 할 평화에 머물

지 않고, 우리 사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 위해 모든 차원의 행위들과 발전 모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할 뜻이 있습니까?”하고 말입니다.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심각한 징후인 비인간적 세계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램페두사 해안에서 발생한 비극의 희생자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치욕’이란 말이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치욕입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해,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난민들을 위해 하느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합시다. 모든 이들의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도움으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동선예의 헌신과 창조적 노력으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번역 : 박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부록2

2013년도 제3회 사회교리주간 행사
(둘째 날)

- 일시 : 2013.12.11.(수) 18:30~21:00
- 장소 :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주제 『평화를 희망하는 일치와 연대』
- 대상 : 사회교리학교 졸업생 및 사회교리학교 수강생 외
- 주최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총동문회

| 순서 | 시간 | 제목 | 내용 | 진행 |
|----|----------------------|-----------|-------------------------------------|------------------|
| 1 | 18:30-19:00 (30분) | 참석자 접수 | 참석자 인사, 다과 나눔 | |
| 2 | 19:00-19:15 (15분) | 주제발표 | 평화를 희망하는 그리스도인 | 구복선 동문 |
| 3 | 19:15-19:40 (25분) | 동영상 감상 | 평화에 관한 동영상 시청 | 동문회 영상제작팀 |
| 4 | 19:40-20:00 (20분) | 휴 식 | 친교의 시간 (다과나눔) | |
| 5 | 20:00-20:15 (15분) | 토론발제 | “평화”란 무엇인가? 그 본질의 올바른 이해 | 서정숙 동문 |
| 6 | 20:15-20:50 (35분) | 전체토론 | 사람들이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 토론진행 : 박경수 동문 |

※ 동문회 영상제작팀 : 오정화, 김수목, 김태정, 김지원

■ 부록3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

박 동 호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1) **분리할 수 없는 종교생활과 사회생활**: 인간이 건설한 사회는 하느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하느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앙과 정의는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정교분리’의 오해)

2) **인간의 존엄함 수호**: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회질서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이성과 지성, 양심, 자유의지). 인간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음과 부활로서 탁월한 지위를 누린다. 인간의 존엄함은 공동체 안에서만 타인과 함께 보호되고 인정받는다. 사회발전(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모든 영역)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3) **공동선 증진** - 공동선이란 인간의 존엄함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회생활의 총체이다. 개인적인 권리들은 항상 공동선 증진의 배경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 국제적 차원의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 공동선과 집단의 이익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4) **보조성 실현** - 책임 수행과 의사 결정은 가능한 한 하위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 단체들, 예를 들어 가정, 이웃, 공동체, 소규모 사업과 지방정부는 반드시 발전해야 하고, 또 그 의사 결정과 책임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 상위 정부 조직들은 공동선을 위해 더 큰 사회 조건과 규칙이 요구 될 때에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

5) **사랑과 정의의 결합:** 이웃사랑은 정의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제도, 구조,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로막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사랑은 정의의 혼이며, 정의는 사랑의 옷이다.

6) **정치, 경제, 사회의 권리수호와 증진:** 사람은 누구나 침해해서는 안 될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들은 시민 및 정치권(투표, 표현, 이주 따위의 권리), 경제권(생존, 노동 따위의 권리), 사회권(교육, 복지 따위의 권리), 문화권, 연대권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이런 권리들은 정의와 연대성의 증진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모든 사회제도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제1의 임무 - 인간 존엄함(인권) 수호와 증진을 통한 공동선 실현.

7) **참여와 책임(정치):**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참여와 책임은 인간의 존엄함과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다. 국제 차원의 공동선은 국제기구의 참여와 책임을 요구한다.

8) **경제 정의와 노동:** 경제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자원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인간의 노동은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이다.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있어서 자본과 시장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노동은 개인의 인성과 존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노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노동할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결사의 권리 따위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9) **관리:** 모든 재화는 사회적으로 유보되어 있다(사유재산권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 우리 모두는 창조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상의 재화를 나누고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발전시키는 공동의 창

조자가 된다.

10)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궁핍과 그들의 권리들을 하느님께서서는 특별하게 보신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경제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11) **평화의 증진:**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이다. 평화는 사람들 사이, 민족들 사이의 옳은 질서를 토대로 한다. 군비경쟁을 끝내야 하며, 점진적 무장해제는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평화와 그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심각한 불균형은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평화 실현의 걸림돌이다.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발전이다.

12) **연대:** 모두는 하나의 인류 공동체 구성원이다. 민족의 경계와 무관하게 어떤 공동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세상이든 우리 모두는 인류의 발전과 권리를 증진시킬 의무를 갖는다. 특히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올바른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3) **해방:** 억압적인 사회, 정치, 경제 구조와 제도로부터의 해방은 교회 활동의 중요한 분야이다. 해방은 정신, 종교 영역을 포함한 전인으로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합니다.”(교회헌장 38항).

■ 부록4

2014년도 사회교리학교 교육일정


| 제 목 | 교 재 | 기 간 | 시 간 | 장 소 | 수 강 료 |
|-------------------------|-----------------------------------|-----------------------------|-------------|-----------------------|---------|
| 제97차 응용과정 (40명) | 세상 속의 그리스도 1편, 2편, 3편 기타 자료 | 1월9일-3월6일 (매주 목, 8주간) | 19:00-21:00 |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50,000원 |
| 제98차 기본과정 (90명) | 가톨릭사회교리 문헌편 가톨릭사회교리 주제편 | 2월3일-5월12일 (매주 월, 13주간) | 19:00-21:00 |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50,000원 |
| 제99차 응용과정 (40명) | 세상 속의 그리스도 1편, 2편, 3편 기타 자료 | 6월2일-6월25일 (매주 월/목, 4주간) | 19:00-21:00 |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50,000원 |
| 제100차 기본과정 (100명) | 가톨릭사회교리 문헌편 가톨릭사회교리 주제편 | 9월15일-12월8일 (매주 월, 13주간) | 19:00-21:00 |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50,000원 |

☐ 수강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454-009601-13-0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우)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621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홈페이지 : www.catholicjp.or.kr

(표지4)

 **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http://www.catholicjp.or.kr>

우)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621호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이메일 : jupecas@catholic.or.kr

제 3 회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
세미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